

현장검증 시각 조작에 없다면 파열장 확인

최종길 교수 의문사 증정서 조직적 은폐

진상규명위, 사진 공개
어제 28주기 추도모임

지난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이른바 '유령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숨진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의 주검에 대한 현장검증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양승규)는 18일 최 교수 사망 28주기를 맞아 두 장의 현장검증 흑백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숨진 최 교수가 흑심한 고문을 당했으며, 당시 중앙정보부 관련자들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했다는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증정이 작성한 현장검증 문서에 따르면 촬영시점이 그해 10월19일 새벽 4시30분~5시로 돼 있으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 이 시간에는 남산분실에서 현장검증이 이뤄지

지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규명위는 또 "당시 증정 발표대로 추락한 주검의 자세로 보기에 여러가지 부자연스런 점이 많다"며 "특히 부검 감정서에는 머리에 찢어진 상처인 파열장이 없는 것으로 돼 있으나 현장사진에는 머리 주변에 지름 60cm 정도의 다량의 피가 고여 있는 점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규명위는 또 "최 교수의 사인에 고문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는 점과 간첩조작의 실제 및 지휘라인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대 근대법학 100주년 기념관에서는 '최종길 교수 추모하는 사람들의 모임'(대표 이수성 전 총리) 주최로 에드워드 베이커 하버드대 엔칭연구소 부소장, 서울 법대 안경환·백종현 교수, 최 교수의 아들 최광준 경희대 법대 교수, 국회의원 황우여씨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 교수 사망 28주기 추도모임이 열렸다. 인수한 기자 ahn@hani.co.kr

"中情서 최종길교수사건 은폐"

의문사규명위 "머리에 혈흔"
부검감정서도 조작 가능성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양승규)는 지난 73년 중앙정보부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숨진 서울대 법대 최종길(崔鍾吉·당시 42세) 교수의 시체에 대한 부검 감정서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2장의 현장검증 흑백사진을 처음 공개하면서 "당시 증정의 부검 감정서에는 최 교수의 머리에 파열장이 없는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이번에 공개된 시체 사진에서는 머리에 직경 60cm 가량의 혈흔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증정이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증정이 작성한 현장검증 문서에 따르면 촬영시점이 그해 10월19일 새벽 4시30분부터 5시 사이지만 관련자들을 조사한



의문사 규명위원회가 18일 처음 공개한 최종길 교수 사망 현장 사진

결과, 이 시간에는 남산 분실에서 현장검증이 이뤄지지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대에서는 '최종길 교수 추모하는 사람들의 모임'(대표 李壽成 전총리) 주최로 최교수 사망 28주기 추도모임이 열렸다. ●이창구기자 window2@kdaily.com

73년 의문사 최종길교수

中情, 부검감정서 조작의혹

■ 의문사추 현장검증 사진공개

'촬영시점' 증정문서와 달라
발표땀 없던 머리상처 보여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간첩혐의로 조사를 받던 숨진 의문사 1호로 꼽히는 서울대 법대 최종길(崔鍾吉·사진) 교수의 시신에 대한 현장검증 사진이 부검 감정서와 크게 차이나 감정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梁承圭)는 최 교수 사망28주기를 하루 앞둔 18일 2장의 현장검증 흑백사진을 공개하면서 "중앙정보부가 작성한 현장검증 문서에 따르면 촬영시점이 그해 10월19일 새벽4시30분~5시지만 관련



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 이 시간에는 남산분실에서 현장검증이 이뤄지지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최 교수 사체에 대한 현장검증 자체가 증정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증정 발표대로 추락한 시신의 자세로 보기에 부자연스러운 점이 많다"며 "특히 부검감정서에는 머리에 찢어진 상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주변에 지름 60cm 정도의 다량의 피가 고여 있는 점도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또 최 교수의 사인에 고문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는 점과 최 교수 간첩조작의 실제 및 지휘라인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수사관들이 심한 폭언과 함께 손과 발 멍둥이 등으로 구타했으며, 통닭구이 고문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대 근대법학 100주년 기념관에서는 최종길 교수를 추모하는 사람들의 모임(대표 이수성·李壽成 전 총리) 주최로 최 교수 아들 최광준(崔光濬) 경희대 법대교수, 에드워드 베이커 하버드대 엔칭연구소부소장, 서울대 법대 안경환(安京煥)·백종현(白忠鉉) 교수, 황우여(黃祐呂) 국회의원 등 70여명이 모인 가운데 최 교수 사망 28주기 추도모임이 열렸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中情, 최종길교수사건 조직적 은폐

1973년 중앙정보부(이하 중정)에서 조사를 받다가 의문사한 최종길(崔鍾吉·사망 당시 42세) 전 서울대 법대 교수의 시체 현장사진 2장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또 중정이 최교수를 간첩으로 발표할 때까지 사실의 은폐와 조작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박정희(朴正熙) 유신체제의 '의문사 1호'로 지목돼온 최교수 사망사건의 진상 규명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문사규명위, 73년 시체 현장사진 첫 공개 머리 혈흔-투신장소-검증시간 조작 가능성

▽시체 현장사진=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梁承圭)는 18일 최교수의 시체 현장사진이 당시 작성된 부검 감정서 및 부검사진들과 많은 차이가 있다며 중정이 최교수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투신장 자체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부검 감정서에는 최교수의 머리 부분에 파열창이 없는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이 현장사진에서는 시체의 머리에 직경 60cm 가량의 혈흔이 확인된다. 파열창이 없이는 이 정도의 혈흔이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

위원회는 "사진상의 혈흔에 강력한 의구심을 갖고 확인작업중"이라며 "시체의 자세도 추락한 것으로 보기에 부자연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중정의 발표대로 최교수가 중정 건물 7층에서 뛰어내려 숨졌다면 최교수의 귀 코 입 등으로 다량의 피가 분출돼 혈흔이 방사상으로 퍼져 있어야 하지만 사진에서는 피가 직선으로 흐른 것으로 나타난 점도 의문이라고 위원회는 밝혔다.

위원회는 현장검증 시간도 조작됐다고 발표했다. 당시 중정의 현장검증 문서에는 현장검증이 10월19일 오전 4시부터 5시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돼있으나 당시 중정 기록과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이 시간에 현장 검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위원회는 당시 다른 장소에서 숨진 최교수를 옮겨 사진촬영을 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유신체제에 항거해 서울대생들의 첫 데모가 일어나자 박정희가 국면 전환을 위해 최교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유족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조사 결과=위원회는 또 최교수 사건을 은폐 조작한 중정의 당시 책임자와 지휘라인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확보했으며 최고 책임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위한 작업에도 상당한 진척이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최교수가 중정의 수사 과정에서 매우 심한 고문을 당했으며 당시 직접 고문을 한 수사관이 누구인지도 사실상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기특기자> ratio@donga.com



사진제공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18일 공개한 최종길교수 의문사 당시 현장 사진.

최종길교수 28주기 추모제

고 최종길 전 서울대 교수의 28주기 추모제가 18일 오후 5시 서울대 근대법학교육 백주년 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추모제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8월 "최 교수가 간첩 혐의사실을 자백한 적이 없었고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한 이후 처음 열린 것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숙연했다.

김학준(金學俊) 동아일보사 사장은 추모사에서 중학 시절 사제의 인연을 맺은 일을 회상하며 "평소 신체의 자유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께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세상을 드신 것은 유신체제가 낳은 역설"이라며 "이런 비극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길 교수 고문치사 진상 규명 및 명예회복추진위원회'는 20일 오후 1시반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내 민주열사 묘역에서 고인의 추모예배를 올릴 예정이다. 02-3672-0251~2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정권비판 세력 '재갈 물리기' 포석

中情, 최종길교수 상대 工作

고 최종길(崔鍾吉) 서울대 법대 교수가 73년 사망 당시 중앙정보부 발표처럼 '유럽거점 간첩단사건' 등 북한의 공작에 연루된 것이 아니라 거꾸로 중앙정보부의 공작에 휘말려 이에 저항하다 숨진 것이라는 물증과 증언 등이 속속 제시되고 있다.

최 교수 사건의 맥락을 잘 아는 한 인사는 "그의 죽음은 유신정권 하에서는 양심적인 자유주의자조차 설 땅이 없었고 선량한 시민도 얼마든지 공작정치 희생양이 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공작의 표적이 되다'=최 교수가 중정의 표적이 된 경위는 그의 동생 중선씨가 중정 동료로부터 들었다는 '최 교수에 대한 공작여건이 성숙했다'는 말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교수회의서 시위진압 항의

최 교수가 출두하기 2주일 전인 73년 10월2일 서울대 법대의 시위를 도화선으로 해 유신정권 출범 1년만에 유신 반대 시위가 대학가로 번져 나가 정권측을 당황케 했다.

이 무렵 중정은 서울대 법대생과 교수 등 지식인들 가운데 반(反)유신세력들을 상대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뤘고 실제 몇 갈래 공작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교수의 지인들은 "그는 법학자로서 유신헌법과 유신정권에 상당히 비판적이었으며 특히 시위 진압과정에서 학생들이 경찰에 구타당하고 연행되자 교수회의에서 '총장이 대통령에게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크게 반발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교수가 황모씨와 함께 동베를린의 지하철약까지 갔었고, 동

최종길 교수 사건일지

- ▶출두 (1973년 10월16일 오후 2시경)
인천중 동기생 이재원의 간첩 혐의 수사에 협조해달라는 중앙정보부의 요청을 받고 친동생인 당시 중정 감찰실 직원과 함께 중정에 출두.
- ▶유럽거점 간첩단사건 발표 (1973년 10월25일 김치열 중정 차장)
최 교수는 서독 유학중이던 58년 중학 동창인 북한 공작책에게 포섭돼 동독에서 간첩교육을 받았다. 60년 평양에서 간첩교육을 받고 공작금 2000달러를 받아 서독으로 돌아왔다. 최교수는 범행 사실을 자백한 뒤 여죄를 조사받다가 중정 화장실 창문에서 투신자살했다.
- ▶최초의 '고문치사' 문제 제기 (1974년 12월18일 민주교정의구현전국사태단)
'최 교수는 전기고문에 의한 심장파열로 숨졌다.'
- ▶공소시효 만료시의 검찰 조사 결과 (1988년 10월18일 서울지검)
최 교수가 타살됐거나 자살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중간 발표 (2001년 8월20일)
'최 교수가 간첩이라는 자백을 한 후' 운운의 당시 중정 발표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수사관들이 최 교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
- ▶의문사진상규명위 2차 발표 (2001년 10월 18일)
최 교수를 간첩으로 규정한 발표가 이뤄지기까지 사실의 은폐 조작이 중정 내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을 확인했다.

베를린 사건 등의 관계자들 가운데 인천중 동창들이 여럿 있었던 점 등도 그를 압박하기에 좋은 구실이었다.

▽중정의 공작과 최 교수의 저항=공작은 최 교수가 간첩 혐의 추궁에 크게 반발해 첫날부터 완강한 저항에 부딪혔다고 당시 중정 관계자는 증언했다. 이 관계자는 "최 교수의 저항으로 조사방향이 상당히 우

왕좌왕했다"며 "그 과정에서 돌발상황이 일어나 최 교수가 죽음에 이른 것"이라고 전했다.

당시 최 교수를 조사한 공작과의 상황도 문제였다. 이 사건에 정통한 중정 관계자는 "72년 유신정권 출범 무렵 중정 5국(대공수사국)에 창설된 이 부서는 김대중 납치사건(73년 8월) 이후 지식인 상대 공작을 5, 6건 벌였지만 모두 실패해 존재가치에 심각한 회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따라서 공작과 수사관들은 심적 부담이 극심했던 마당에 최 교수에 대한 공작마저 뜻대로 되지 않자 심한 가혹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건은폐 지휘라인 윤곽"

▽누가 사건을 은폐·조작했나=최 교수를 공작대상으로 선정하고 그가 숨진 뒤 간첩사건을 조작·은폐한 책임자가 누구인가가 최종 관심사.

최 교수의 학내 발언과 행동거지는 중정의 서울대 담당 조경관 김모씨와 유신정권에 협조적이던 교수 등을 통해서, '최 교수가 유럽거점 간첩단사건의 주범 이모씨(인천중 동창)의 부친상에 갔었다'는 정보는 동창들을 통해 취합하는 등 서로 관계없는 다양한 경로로 정보가 수집됐다.

이를 취합해 최 교수를 공작대상으로 지목하고 그가 숨진 뒤 당시 별개로 진행되던 간첩단 사건(수사과 소관)과 최 교수 사건(공작과 소관)을 하나로 엮어내려면 중정 내부에서도 상당한 고위직이 아니면 불가능했다는 관계자들의 증언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최 교수 사건을 은폐·조작한 중정 지휘라인에 대해 많은 정보를 확보했다"며 책임소재의 규명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한기특기자> ratio@donga.com

“최종길교수 中情공작 희생양”

독일 유학때부터 포섭대상... 끝내 거부하다 의문死



고 최종길 교수

본보, 최교수 자술서·中情관계자 증언 입수

고 최종길(崔鍾吉) 서울대 법대 교수 의문사 사건의 실체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당시 중앙정보부(이하 중정)가 최 교수를 상대로 장기간 공작을 벌여온 사실이 확인됐다.

본보가 입수한 최 교수의 중정 조사 당시 자필진술서 등에 따르면 중정은 최 교수의 독일 유학시절부터 그를 상대로 공작을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 교수의 자술서=중정 출두 첫날 최 교수가 작성한 70여쪽 분량의 자술서에 따르면 최 교수는 독일 유학 중이던 62년 중정의 비밀공작원 황모씨(유학생)의 권유와 호기심 때문에 동베를린행 지하철에 함께 탔으나 동베를린의 프리드리히 슈트라스에 와서 곧바로 돌아왔다.

최 교수는 서베를린대에서 열린 특별간좌에 함께 참석했던 황씨의

권유로 동베를린의 첫 지하철역까지 갔으나 갑자기 나역에서 바로 서베를린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했다.

당시 수사관들은 △황씨가 중정 공작원이었으며 △황씨와 최 교수가 동베를린에 갔다는 등의 사실을 62년에 이미 알았으며 최 교수의 자술 이후 이 문제를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당시 최 교수에 대한 황씨의 동베를린 권유는 유럽 유학생들의 동베를린 왕래를 포착한 중정의 역공작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황씨는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의 통화에서 “나는 중정과 아무 관계가 없으며 58년경 관광차 동베를린을 한차례 방문했지만 그때 최 교수와 함께 갔는지는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중정 관계자 증언=당시 중정 관계자는 “최 교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 할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그를 상대로 한 공작이 73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당시의 중정 수사관들을 상대로 조사해 작성한 진술서. 황모씨가 ‘중정의 공작원’ 이었다고 증언한 내용이 들어 있다.

당시 진행 중이었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해 최 교수의 동생으로 당시 중정 감찰실 직원이던 종선(鍾善·54)씨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형님 사건이 대강 수습된 뒤 동료로부터 ‘최 교수 출두를 앞두고 중정 안에 최 교수 상대의 공작여건이 성숙했다는 말이 들었다’고 들었

다”고 증언했다.

최 교수에 대한 조사과정도 간접 수사를 맡아온 중정 5국(대공수사국)의 9과(수사과) 등이 아니라 공작과인 10과가 맡은 것으로 밝혀져 공작 시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협기특기자〉
ratio@donga.com

‘타살’ 가닥... 의문사 규명 가속도

수사관 고문·부검 감정서 일부 조작등 확인 타살 결론때는 당시 지휘계통등 수사 불가피

최종길교수 사인의혹 새국면

‘의문사 사건 1호’로 꼽히는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가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해 타살됐다는 진술이 새롭게 나오며 따라 최교수 사인에 대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 규명 작업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 최교수가 타살된 것으로 결론날 경우 지난 87년 안기부의 수지김 간첩 조작 사건과 마찬가지로 당시 지휘계통에 대한 전면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롭게 드러난 타살 증언=지난해 11월 최교수 사건을 처음 접수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그동안 최교수의 사망 원인에 대해 ‘중정 수사관들에 의한 고문치사’에서부터 ‘단순 투신자살’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벌여 왔다. 위원회는 지난 10월 사건 당시 중정 직원들과 최교수와 함께 조사를 받았던 김모씨 등에 대한 소환조사 결과 최교수가 중정 수사관들로부터 고문을 당한 사실을 확인했고 중정이 발표한 부검 감정서가 일부 조작된 사실도 밝혀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중정 사무실에 남아 근무하고 있던 간부 A씨가 ‘중정 수사관들이 최교수를 건물 밖으로 던졌다’고 진술함에 따라 최교수가 가혹한 고문으로 인해 가사상태에 빠졌거나, 이미 죽음에 이르러 수사관들이 자살로 은폐하기 위해 최교수를 건물 밖으로 던졌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간첩으로 짜맞추기 위해 무리한 조사를 벌였지만 최교수가 끝까지 이를 부인하자 수사관들이 건물 밖으로 던져 숨지게 했을 개연성도 있다.

△파장과 수사 전망=의문사 진상규명위는 중정 수사관들에 의한 의도적 살인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중정의 사건 공작 전모와 조직적 은폐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1973년 사건 발생 직후 중정은 자체 검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사를 받던 최교수가 화장실에 갔다 동행했던 수사관 김모씨의 만류를 뿌리치고 창 밖으로 투신했다”면서 김씨 등 담당 수사관 2명을 직

무대만 등으로 자체 징계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최교수가 타살됐다면 이 사실이 당시 지휘계통에 보고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후락 부장 등 중정 최고 간부들이 자살로 은폐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비록 이번 사건이 타살로 결론이 나도 공소 시효가 이미 끝나 사건에 관련된 당시 중정 간부들에 대한 처벌은 할 수 없다. 하지만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과거 정보기관에 의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이들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하고 진상 규명을 통해 도의적인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는 당분간 A씨 진술의 신빙성과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언 및 증언 확보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상황을 목격하고 A씨에게 보고한 중정 직원 B씨가 이미 사망한 상황”이라면서 “사건 관련자들을 다시 소환해 타살 여부에 대해 재조사를 발의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수기자 normad@kmb.co.kr



간첩단 연루혐의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간지 3달만에 풀려난 안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 최종길 서울대 교수와 사망 직후 모습. 국민일보 자료사진

최종길교수 사건 ‘유령간첩단’ 참고인 출두... 3일만에 변사체로

최종길 교수는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1973년 10월16일 중앙정보부가 조사하고 있던 ‘유령간첩 간첩단 사건’의 참고인으로 당시 중정 감찰실 직원이었으며 종선(鍾善)씨와 함께 중정 남산 본실에 자진출두했다가 3일 만인 19일 새벽 1시 45분쯤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됐다.

당시 중정은 사건을 발표하면서 “최교수가 간첩 사실을 시인한 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중정 건물 7층 화장실에서 투신자살했다”고 밝혔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지난 1988년에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의 고발로 검찰에서 재조사가 이뤄졌지만 진상 규명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후 유령과 민주화 세력은 △부검 사건의 고문 흔적 △중정 직원 종선씨에게 “자살로 함의해 주면 거액을 주겠다”고 화유한 점 △추락 장소에 혈흔이 없었다는 중정 간부의 진술 등을 들며 끊임없이 진상규명을 요구해 왔다.

지난해 11월말 유가족으로부터 진정을 접수한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최교수가 간첩이라고 지백한 적이 없으며 당시 중정이 사건 결과에 대해 허위 발표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검시기록 및 중정직원 등에 대한 조사결과 사체 영엄이 부본에 맞춘 흔적이 발견되는 등 최교수가 고문당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영수기자

“최종길교수 창밖 던졌다”

73년당시 中情직원 ‘타살’ 새 증언

“고문한후 자살로 은폐” 의문사규명위서 진술 재수사등 파문 일듯

지난 73년 중앙정보부에서 간첩단 연루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던 중 사망한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당시 42세·사진)는 중정 직원들에 의해 타살된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기사 5면)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는 최교수 의문사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당시 중정 직원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최교수에 대한 타살 의혹은 수없이 제기됐지만 당시 중정 직원들로부터 타살됐다는 직접 진술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10일 의문사진상규명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사고 발생 당시 중정 건물 7층에 있던 중정 간부 A씨에 대한 지난주 참고인 조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차모씨 등 수사관들이 최교수를 중정 건물 창 밖으로 던졌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받아들였다.

위원회 관계자는 “A씨의 진술로 미뤄 차씨 등 당시 수사관들이 최교수를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조사하다가 고문 등으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자살로 은폐하기 위해 최교수를 건물 밖으로 내던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양위원장은 “당시 중정 수사관들이



“앞으로 가혹행위에 의한 타살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교수 타살 및 조직적인 은폐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당시 지휘계통에 있던 김모 차장과 이후락 부장 등 중정 고위 간부에 대한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위원회는 최교수 사건을 놓고 △고문에 의한 치사 △고문을 피할 목적으로 한 투신자살 △모욕적 수사 방식에 항거한 투신자살 등 사인에 대해 다양한 조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번 진술 확보로 중정 수사관들이 고문을 은폐하고 단순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최교수를 건물 밖으로 던져 숨지게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위원회는 이달 말쯤 최교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최종보고서를 작성·제출한 뒤 이르면 다음달 초 김대중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중정은 사건 직후 “최교수가 73년 10월19일 새벽 1시45분쯤 복한의 간첩임을 자백하고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 남산 분실 7층 화장실에서 투신자살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영수기자 nomad@kmib.co.kr

“아버지 억울한 죽음 밝혀질것”

故최종길교수 아들 광준씨 ‘他殺증언’에 “진상 꼭 규명돼야”

“28년을 기다렸는데... 이번이 마지막기회” 초등학교때 5번 전학... 끝내 유학떠나

“타살이라는 확신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부터 하고 있었 습니다. 이번 중앙정보부 직원의 증언으로 진실을 가리고있던 배



◇최광준씨

일이 벗겨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 사망한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가 중정 직원에 의한 타살이라는 육성 증언이 당시 중정 간부에 의해 제기된 10일 아들 광준(37·경희대 법대 교수)씨는 “사릴 귀찮”이라며 담담하게 소감을 밝혔다.

광준씨는 “아버지의 사인을 밝히는 것은 단지 유족의 문제만이 아니라 진실을 규명하고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국가가 과거에 행한 잘못을 씻을 수 있는 최초이자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만큼 이번엔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해자들에 대해 미운 감정은

없으며 그들을 용서하고 싶다”는 광준씨는 그러나 “용서에 앞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먼저고 용서를 비는 사람이 있어야 용서를 하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간첩혐의로 조사를 받다 의문사한 최종길 서울대 교수의 단란했던 한때 가족 모습.

는 사람도 있다”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당시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던 중정관계자들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털어냈다. 내내 차분한 어조로 말을 이어가던 광준씨는 지나간 세월을 회고해 달라고하자 “지금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신다한들 28년 동안 가장 없는 삶을 살아온 우리 가족들 비는 사람이 있어야 용서를 하

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선친이 군사독재의 억압에 스러졌을 당시 9살이었던 광준씨는 “부친의 간첩 누명 때문에 초등학교 시절 5차례나 전학을 다녔고 중정의 감시로 추모미사마저 드리지 못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독일로 유학을 떠난 광준씨는 선친이 전공했던 민법을 공부하는 것이 선친이 못다한 일을 이루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최종길 교수가 박사학위를 받은 쾰른대학 같은 지도교수에게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최종길 교수의 죽음은 동생 종선(54·재미사업가)씨 인생의 향방도 바꿔놓았다. 73년 중정에 수석 합격해 검찰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종선씨는 “동생 다니는 직장이나 한번 보라”며 그해 10월16일 최교수를 자진출두케 했다. 그러나 출두 3일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형이 되돌아오자 종선씨는 죽음의 진실을 캐는 데 자신의 인생을 걸었다. 종선씨는 중정의 감시를 벗어나기 위해 정신병을 가장해 세브란스병원에 입원까지 하며 권력기관을 상대로 외롭고 힘든 싸움을 했다. 종선씨는 이후 미국으로 건너갔고 지난 3월에는 ‘산자여 말하라, 나의 형 최종길 교수는 이렇게 죽었다’는 수기를 출간했다. /황진영기자 buddy@sgt.co.kr

73년 中情 조사중 의문사 崔鍾吉교수 “수사관이 7층서 떠밀어”

의문사규명위 ‘당시 中情간부 증언’ 발표 中情간부 “부하가 수사관에 들었다 말해” 부하는 93년 사망... 수사관은 혐의否認

지난 73년 중앙정보부에서 간첩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의문사한 서울대 법대 최종길(崔鍾吉·당시 42세) 교수의 사인(死因)이 투신 자살이라는 중정(中情) 발표와는 달리, 중정 수사관이 최 교수를 7층에서 밀어 떨어뜨렸다는 중정 간부의 증언이 나왔다. ▶관련기사 3면



최종길 교수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梁承圭)는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수사관 안에 있던 중정 간부 A씨가 ‘조사를 담당하던 중정 직원이 최 교수를 7층에서 밀어 떨어뜨렸다’는 말을 다른 중정 직원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지난달 의문사 규명위 관계자들에게 “(73년 10월 19일) 사고 직후 최 교수를 직접 조사한 중정 직원 중 한 명이 7층 조사실 옆방에서 자고 있던 다른 직원 B씨를 비상계단으로 불러낸 뒤 ‘양손으로 미는 시늉을 하면서 여기서 밀어버렸어’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B씨로부터 전해들은 일이 생생히 기억난

다”고 증언했다. 당시 최 교수 조사를 담당했던 중정 내부 간부가 타살 가능성을 직접 증명한 것은 처음이다. A씨의 증언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73년 당시 중앙정보부의 “간첩 사실을 시인한 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중정 건물 7층 화장실에서 투신자살했다”는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규명위는 이에 따라 당시 조사를 지휘한 이후라 전 중앙정보부장과 김치열 정보부 차장 등 2명에 대해 지난 8일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양측으로부터 모두 “치매 등 건강상의 이유로 진술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금주 중 이들에게 다시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규명위원회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우선 A씨에게 타살 가능성을 전해 줬다는 중정 직원 B씨는 지난 93년 사망했으며, B씨에게 최 교수 타살을 알려줬을 가능성이 높은 현장의 중정 수사관 2명은 A씨의 이 같은 증언을 강력히 부인하거나 조사 자체를 아예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최 교수가 밀려 떨어질 당시 고문 등으로 가사(假死) 상태였는지,

아니면 이미 숨져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최 교수는 서울대 법대교수로 재직하던 73년 10월 16일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 참고인 자격으로 중정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던 중 3일 만인 19일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됐다. /崔有植기자 finder@chosun.com /白承宰기자 whites@chosun.com

中情서 조사받다 사망 유신이후 의문사 ‘1호’

최종길교수 사건이란

최종길 교수 사건은 최 교수가 1973년 10월 16일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 중 중앙정보부가 조사하던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의 참고인 자격으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간 지 3일만에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 뒤 정권에 의한 타살의혹이 제기돼 28년간을 끌어온 사건이다. 당시 최 교수의 주검은 10월 유신후 국내 의문사 1호로 기록된다.

중정이 최 교수에게 덮어 씌운 혐의는 서독 필름대 유출 시절 포섭돼 동독을 거쳐 평양을 20일 동안 방문, 간첩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다. 변사 사건이 발생한 뒤 같은 달 25일 중정은 “최 교

수가 유럽거점 간첩단의 일원임을 자백한 뒤 죄책감으로 중정 건물 7층 화장실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고 발표하고 사건을 서둘러 종결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이를 받아들

73년 ‘유럽간첩단사건’ 연루 참고인출두 3일후 변사체로 유족들 끊임없이 他殺의혹 제기

이지 않고 ▲최 교수의 부검 사 진에 고문 흔적이 발견된 점 ▲정보부가 동생 종현씨에게 자살로 합의해 주면 거액을 주겠다고 회유한 것 ▲추락 장소에 혈흔이 없었다는 정보부 간부의 진술 등을 들어 끊임없이 타살 의혹을 제기해 왔다. 88년 천주교정의구

현사제단은 최 교수 사건의 공소 시효 만료를 앞두고 검찰에 고발, 재조사가 이뤄졌지만 진상은 규명되지 않은 채 방치돼 왔다.

지난해 11월 말 유가족에게서 진정을 접수한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최 교수가 간첩이라고 자백한 적이 없다는 것과 당시 중정이 사건 결과에 대해 허위로 발표한 사실을 밝혀 냈다.

또한 최 교수를 간첩혐의로 옥아매는데 결정적인 증거였던 최 교수의 62년 동배블린 방문도 당시 중정의 공작원인 황 모씨가 독일 유학 중이던 최 교수에게 권유했던 것으로 새롭게 밝혀졌다.

/김중수기자 katusa19@sgt.co.kr

유신독재시절 ‘깨어있는 지식인’ 평가

최종길교수 누구인가

최종길 교수는 1972년 10월 유신 직후 서슬퍼런 군사독재 시절에도 거침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깨어있는 지식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최 교수는 중앙정보부에 출두하기 전에 열린 서울대 법대 교수회의에 참석해서 “총장과 교수

진이 유신 반대 시위로 체포된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교수를 아는 지인들은 “최 교수는 법학자로서 유신헌법과 유신 정권에 상당히 비판적이었으며 특히 시위 진압과정에서 학생들이 경찰에 구타당하고 연행될 때마다 교수회의를 통해 ‘총장이 대통령에게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

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최 교수는 또 생전에 10살 내외의 2명의 아들과 딸에게 한국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전장에 뛰어들어 미군 통역관으로 복무했던 것과 공산주의에 맞서 싸운 참전 무용담을 들려주던 ‘반공주의자’였다고 유족들은 전했다.

특히 최 교수는 공산주의자를 ‘빨갱이’라고 부를 정도였기 때문에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 보더라도 좌익이나 간첩 활동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중수기자 katusa19@sgt.co.kr

“의문사 최종길교수 中情직원의해 타살”

“7층에서 밀어” 당시직원 진술 규명위, 이후락씨도 조사방침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0일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유럽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다 의문의 죽음을 당한 서울대 법대 최종길(당시 42세) 교수가 중정 직원에 의해 타살됐다는 진술을 당시 중정 직원으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다.



故 최종길 교수

(관련기사 30-31면)
증정이 복한의 간첩임을 지적하고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 7층 회장실에서 투신자살했다고 공식 발표한 최종길 교수 사건은 그동안 끊임없이 타살 의혹이 제기돼 왔지만 당시 중정 직원으로부터 타살됐다는 진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73년 당시는 10월유신이 선포된 다음해로 정치와 언론에 대한 탄압이 자행되던 시기였다.

최 교수는 그해 10월16일 중정이 조사하던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의 참고인으로 당시 중정 감찰실 직원이었다던 동생 중선씨와 함께 중정 남산본실에 자진출두했다가 3일만인 19일 오전 1시45분쯤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됐다. 중정은 당시 “최 교수가 북한 간첩활동을 자백하고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 남산본실 7층에서 투신자살했다”고 발표했다.

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사고 발생 당시 수사지휘라인에 있던 중정 간부 A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 “사고가 있었던 날 부하직원 B씨가 나를 7층 조사실 옆 비상계단으로 데려가더니 양손으로 미는 시늉을 하면서 ‘최 교수를

조사하던 차모씨 등 수사관 2명이 여기서 최 교수를 밀어버렸어”라고 말하던 기억이 생생하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그러나 위원회는 당시 최 교수를 밀어 떨어뜨린 의혹을 받은 차씨 등 수사관 2명이 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B씨는 1983년 사망했기 때문에 A씨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좀더 조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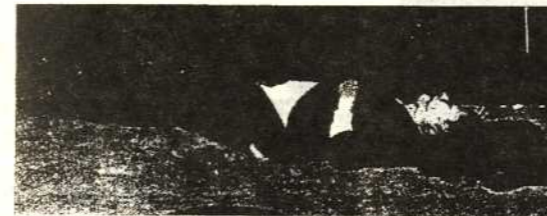
“황진영기자buddy@sgt.co.kr

◇故 최종길 교수

‘假死상태’ 자살위장 가능성

■ ‘최종길교수 타살’ 증언 파장

“의문사 1호” 서울대 최종길 교수가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타살됐다는 진술이 중정 핵심 관계자에게서 나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이 곧 밝혀질 전망이다. 최 교수가 타살된 것으로 결론나면 당시 지휘 계통에 대한 전면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간첩단 연루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간 뒤 정보부 미당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 최종길 교수의 사망 직후 사진

고문·부검 감정서 일부조작 확인 살인 확인땀 전면 재수사 불가피 “반인륜범죄 조약 적용 책임물어야”

◆새로 밝혀진 사실 당시 최 교수를 수사한 중앙정보부 5국 핵심 관계자 A씨는 “최 교수가 송진 직후 직계 부하 B씨로부터 ‘조사관들이 최 교수를 건물 밖으로 나 있는 7층 비상계단으로 끌고가 밀어버렸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B씨가 “사건 발생 직후 동료인 수사관이 (나를) 비상계단 쪽으로 데려가더니 양손으로 미는 시늉을 하면서 ‘(내가) 여기서 밀어버렸어’라는 말을 했다”고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최 교수가 가혹한 고문으로 가사 상태에 빠졌거나, 이미 죽음에 이르러 수사관들이 자살로 은폐하기 위해 최 교수를 건물 밖으로 밀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의식이 있었던 최 교수를 건물 밖으로 먼저 숨겨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당시 중정은 “조사를 받던 최교수가 화장실에 갔다가 동행했던 김모 수사관의 만류를 뿌리치고 소변기를 밟고 창 밖으로 투신했다”고 자체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규명위는 “중정은 조사 이틀째인 1973년 10월18일 최 교수에게 간첩 혐의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면서 “최 교수를 죽음으로 이끈 것도 명백히 중정의 공적이었다”고 결론 내렸

다. 고문에 직접 참여했던 수사관 2명을 조사한 결과, 잠 안 재우기, 모욕, 무릎 사이에 각목을 끼우고 굴리기, 몽둥이 구타 등의 고문을 한 사실도 밝혀냈다. 규명위는 또 중정이 최교수에 대한 긴급구속명령과 압수수색명령은 물론, 사망현장 검중조사 등을 감찰을 통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수사 전말 및 피해 규명위는 중정 수사관들에 의한 의도적 살인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건 공작 전모와 조직적 은폐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 교수가 타살됐다면 이 사실이 당시 지휘 계통에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후락 부장 등 당시 중정 최고 간부들이 자살로 은폐하도록 지시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타살로 결론이 내려도 공소시효가 지나 당시 중정 간부들을 국내법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김형태 상임위원은 “공소시효와 상관 없이 처벌 가능한 ‘반인륜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배제 국제 조약”을 적용해서라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window@kdsaily.com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김형태 상임위원이 10일 최종길 서울대 법대교수 사망 이후 중앙정보부에서 ‘최 교수가 번기를 밟고 창문으로 뛰어내렸다’며 자살장르로 제시했던 사진을 내보이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역사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 의문사 진상 이번엔 밝혀야”

■ 최종길교수 아들 광준씨

“어제 신정일 뿐입니다. 국가가 스스로 아버지의 타살 사실을 고백해야만 그동안 쌓인 우리 가족의 한도 풀릴 수 있습니다.”

최종길 교수가 지난 73년 중앙정보부 수사관에 의해 떠돌아다니는 사신이었던 10월 최 교수씨 아들 광준(1949·37·경희대 교수)씨는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실을 찾아 이렇게 절규했다.

최씨는 “정부가 지난 28년 동안 이 사건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의문사 희생자들에 대한 진상규명만이 비뚤어진 우리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금은 아버지를 고문했던 중



정 수사관들에 대한 미온 감정마저 시라졌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다만 죄인을 용서하고 싶어도 누구를 용서해야 할지 모르는 현실이 갑갑하다는 말로 그동안 휘둘러 고통을 토로했다. 최 교수의 사망사건 당시 9살이었던 광준씨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이틀 전 건강검 체계의 중정 수사관 두명이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버지는 곧 집에 오실거야’라고 한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면서 “진실은 100% 밝혀야 진실이지 알부만 밝히는 것은 진실이 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영표기자 tomcat@kdsaily.com

“최종길교수 타살됐다”

中情수사관이 7층서 떠밀어

의문사 진상조사위, 당시 中情간부 진술확보

지난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유령거점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다가 의문의 변신체로 발견된 서울대 법대 최종길(崔鍾吉·당시 42세·사진) 교수는 조사 도중 스스로 창밖으로 뛰어내렸다는 당시 발표와는 달리 수사관에 의해 떠밀려 떨어졌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에 따라 최 교수가 고문을 피하기 위해 또는 모욕적인 수사에 항의해 투신했을 가능성보다는 수사관들에게 '타살'됐으며 중정은 이를 알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련기사 3편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김형태 제1 상임위원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최 교수를 조사했던 수사관의 핵심 간부인 A씨를 조사한 결과, 최 교수가 타살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

혔다.

A씨는 "당시 부하 직원 B씨가 '최 교수'를 조사하던 차모씨 등 2명이 조사실 옆 7층 비상계단에서 최 교수를 밀어 건물 밖으로 떨어뜨렸다"고 보고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B씨 등 3명을 추적해 조사했으나 "B씨는 이미 사망했고, 국내에 없는 차씨와 미국에 있는 C씨는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진상규명위 조남관 조사 1과장은 "B씨가 사망해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망자의 진술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특히 "최 교수 조사 및 사망과 관련해 중정에서 작성한 사망진단서와 사체감안서 등 5건 모두가 허위로 작성됐다"면서 "특히 현장검



김형태 위원장

증 조서의 경우 검증 참여자로 기록된 인사들 중 실제로 검증에 참여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형태 위원장은 "당시 중정부장인 이후락씨의 차장 김치열씨에게 지난 4일 소환장을 보냈으나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다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규명위는 이 전 부장과 김 전 차장을 소환해 중정의 조직적인 조작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규명위는 남아공, 영국, 일본 등 3개국 법의학자에게 최 교수의 사인 규명을 의뢰, 이 중 2개국 법의학자로부터 답신을 받아 분석 중이며 이달 말쯤 조사를 마무리해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창구 이명기자 tomcat@kdaily.com

타살정황 구체화 진상규명 속도

■ 최종길교수 의문사 밝혀지나
목격자 중정직원 사망
지휘계통 조사 불가피
이후락씨는 소환 불응



“밀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김형태 상임위원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를 중정 직원들이 창밖으로 밀어 떨어뜨렸다는 중정 전직 간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의문사 사건 1호'로 꼽히는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가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해 타살됐다는 진술이 새롭게 나오며 따라 최 교수 사인에 대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 규명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최 교수 사건을 처음 접수한 규명위는 그동안 최 교수의 사망원인에 대해 '중정 수사관들에 의한 고문치사'에서부터 '단순 투신자살'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벌여 왔다.

특히 지난 10월 사건 당시 중정 직원들과, 최 교수와 함께 조사를 받았던 김아무개씨 등에 대한 소환조사 결과 최 교수가 중정 수사관들로부터 고문을 당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중정이 발표한 부검 감정서가 일부 조작된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중정 사무실에 남아 당직 근무를 했던 간부 7씨가 "중정 수사관들이 최 교수를 건물 7층 바깥쪽 비상계단에서 밀어내었다는 보고를 들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규명위는

소견서와 주검 및 현장검증 사진 등 관련 자료를 한두달쯤 전에 영국·일본·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법의학 전문가에게 보내 의견을 구해 놓았다"며 "남아공과 영국에서는 의견서가 이미 도착해 번역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규명위는 최 교수가 타살됐다고 주장한 7씨 진술의 신빙성과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언 확보에 조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규명위의 조남관 조사1과장은 "상황을 목격하고 7씨에게 보고한 중정 직원 4씨가 이미 사망한 상황"이라며 "사건 관련자들을 다시 소환해 타살 여부를 재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규명위는 또 최 교수가 타살됐다면 이 사실이 당시 지휘 계통을 따라 상부에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후락 부장과 김아무개 차장 등 당시 중정 최고 간부들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규명위 관계자는 "이미 지난주 이 부장 등에게 소환장을 보내 이번주 중에 출두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두 사람 모두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며 "이들이 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태인지 소문을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73년 사건 발생 직후 중정은 자체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사를 받던 최 교수가 화장실에 갔다 동행했던 수사관 김아무개씨의 민류를 뿌리치고 창 밖으로 투신했다"며 김씨 등 담당 수사관 2명을 직무태만 등으로 자체 징계하는 데 그쳤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최종길교수 7층서 밀었다’ 들어” 중정간부 ‘타살’ 증언

의문사규명위 조사 증거확보 박차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간첩단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던 중 숨진 서울대 법대 최종길(당시 42살·사진) 교수는 중정 직원들에 의해 타살됐다는 중정 핵심간부의 증언이 나왔다.

그동안 최 교수에 대한 타살 의혹은 수없이 제기됐지만 당시 중정 직원한테서 타살됐다는 직접 진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3면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이하 규명위)는 10일 ‘최 교수 의문사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당시 최 교수 사건 조사책임에 있던 핵심 간부 7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결과 이런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 간부는 규명위 조사에서 “사고 발생 당일 중정 건물 7층에서 당직



근무를 하던 중 함께 근무하던 부하직원 7씨가 ‘최 교수를 조사하던 차아 무개씨 등 수사관들이 최 교수를 중정 건물

7층 건물 바깥 비상계단에서 밀어버렸다’고 말하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7씨 말로는, 최 교수는 자살한 것이 아니라 타살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규명위는 밝혔다.

그동안 규명위는 최 교수 사건을 놓고 △고문에 의한 치사 △고문을 피할 목적으로 한 투신자살 △모욕적 수사방식에 항거한 투신자살 등 사인에 대해 다양한 조사를 벌여왔다.

김형태 규명위 상임위원은 “당시 중정 핵심간부가 ‘최 교수가 타살됐다’는 진술을 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미 일본 등 3개

국에 요청해 놓은 사망원인에 대한 법의학 감정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검토해 최 교수 사망원인에 대한 위원회의 공식견해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어 “당시 중정이 내놓은 현장 검증조서는 현장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며, 현장에서 검증을 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어 날조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긴급구속영장·피의자 신문조서 등 관련 서류도 모두 최 교수가 숨진 뒤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당시 중정은 사건 직후 “최 교수가 73년 10월19일 새벽 1시45분경 북한의 간첩임을 자백하고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 남산 분실 7층 화장실에서 투신 자살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규명위는 이달 말께 최 교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보고서 작성한 뒤 이르면 다음달 초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최교수 ‘죽음의 진실’ 밝혀지나

· 규명위 ‘타살’ 진술에 조사박차

1973년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다 투신 자살한 것으로 발표된 최종길 교수 사건에 대해 ‘수사관이 최교수를 밀어 떨어뜨렸다’는 중앙정보부 관계자의 진술이 나오고, 당시 중정 수뇌부에 소환장이 발부름에 따라 이 사건의 진상규명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추락사의 정황=당시 수사책임선상에 있던 간부가 “외부 비상계단으로 끌고가 아래로 밀어버렸다”는 타살임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타살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위원회는 최교수의 투신을 목격했다는 당시 두 수사관의 진술 차이가 크고, 법의학적 측면에서 볼 때도 투신 사진이 조작돼 타살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진술이 이미 사망한 제3자를 통해 얻어낸 것이고, 최교수를 밀어뜨렸다는 수사 당사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는 있다.

◇중정의 치밀한 조작=위원회는 그동안 중정에서 잠 안재우기, 몸동이 구타 등 최교수에게 심각한 고문

이 자행됐음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또 최교수를 담당한 수사관을 통한 조사에서 이미 ‘간첩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린 점과 현장검증조서, 긴급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피의자 신문조서 등 관계 공문서가 모두 허위로 작성됐음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최교수의 간첩혐의는 중정에서 조작됐고, 수사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을 은폐,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정, 어느 선까지 관계됐나=위원회는 적어도 대학교수가 중정에서 고문 등에 의해 타살되고 자살로 조작됐을 경우라면 중정 수뇌부까지 관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지난 4일 당시 중정 차장인 김치열씨와 부장인 이후락씨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차매 등 건강상의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강제구인 등의 물리적



의문사진상규명위가 공개한 최종길 교수 사망 현장사진. 추락자세 등으로 미뤄 시후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간첩혐의’ 중정조작 밝혀져 당시 이후락부장등 관련자 공소시효 지나 처벌 미지수

권한이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을 소환, 조사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회의적이다.

◇향후 전망=진상규명위원회는 김치열·이후락 두 사람의 소환 여부와 관계없이

최교수의 사망은 당시 중앙정보부에 의한 타살이라고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최교수 사망 당시 정황과 고문이 자행된 점, 당시 문서 등이 조작된 것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다. 위원회는 이달말 전체 위원회를 소집, 이같은 내용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 현행법상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국제관습법상 반인륜적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국제적 관습이 이번 최교수 사망사건에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이로써 73년 사건 이후 88년 검찰의 재수사를 통해서도 밝혀지지 못한 최교수 사망사건은 결국 공권력에 의한 타살로 밝혀지게 됐다.

원희복기자 wonhb@kyunghyang.com

73년 中情서 조사중 의문사 최종길교수 “수사관이 7층서 떼밀어 사망”

의문사규명추, 당시 중정간부 진술 확보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자살한 것으로 발표된 최종길 서울대 교수(당시 42세·법학·사진) 의문사사건을 재조사중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0일 “최교수가 간첩혐의로 조사받던 중 계단으로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조사관에 의해 떼밀려 숨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당시 중정의 수사 책임자였던 모 간부는 참고인 진술에서 “수사관(들)이 건물 외벽의 비상계단에서 최교수를 아래로 밀어 떨어뜨렸다는 얘기를 부하직원 모씨에게 했으며 이 부하직원이 사건 당일 이 사실을 나에게 얘기했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기사 26면 이 간부는 “담당수사관이 최교수 사



망사고 직후 부하직원을 7층 화장실 옆 비상계단으로 끌고가더니 양손으로 미는 시늉을 하면서 ‘여기서 밀어버렸어’라는 말을 했다고 (부하직원이) 내게 말하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증언이 사실로 밝혀지면 73년 당시 “간첩사실을 시인한 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중정 건물 7층 화장실에서 투신 자살했다”는 중정의 발표내용은 허위로 드러나게 된다.

위원회는 그러나 최교수가 고문 등에 의해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떨어진

것인지, 추락에 의한 사망인지 여부는 계속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김형태 상임위원은 “최교수의 조사 및 죽음과 관련, 중정에서 작성한 문서 5건 모두가 허위였음이 드러났다”며 “당시 중정이 최교수 죽음의 진상을 알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당시 중정 김치열 차장, 이후락 부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으나 당사자들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이달말 이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중이던 최교수는 73년 10월16일 중앙정보부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다가 변사체로 발견됐다. 당시 중정은 최교수가 유령간첩단 사건에 연루됐음을 자백하고 7층 조사실 참문을 통해 투신,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원희복기자

wonhb@kyunghyang.com

‘의문사 1호’ 진실 찾나

‘의문사 1호’ 최종길 교수를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7층 비상계단에서 떨어뜨렸다는 진술이 확보됨에 따라 최 교수 사인에 대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가 결론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조사를 주도하는 김형태 제1상임위원도 “늦어도 이 달 말이면 위원회의 공식 결론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교수가 타살됐고 이를 당시 중앙정보부가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했다고 공식 결론이 나올 경우 1987년 안기부의 수사지침 간첩 조작 사건과 마찬가지로 당시 지휘계통에 대한 전면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최종길교수 사건 새증언 은폐·조작 결론나면 전면 재수사 불가피

새로운 타살 증언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10월 당시 중정 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최 교수가 중정 수사관들로부터 고문을 당했고 중정이 발표한 현장경중조사·부검감정서 등이 조작됐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번 상황에서 당시 중정 사무실에 남아 근무하고 있던 간부 최 교수를 7층 비상계단에서 건물 밖으로 밀었다는 수사관의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중정이 최교수를 간첩으로 짜맞추기 위해 무리한 조사를 벌였지만 끝까지 이를 부인하자 수사관들이 건물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또 다른 증정간부가 “최 교수가 간첩단과 연루되지 않았다는 내부 결론을 소환 2일만에 내렸다”고 증언한 것도 이 같은 해석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수사 전방 의문사 진상규명위는 중앙정보부에 의한 의도적 살인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중정의 사건 공작 전모와 조직적 은폐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1973년 사건 발생 직후 중정은 자체 감찰 결과 발표하면서 “조사를 받던 최 교수가 화장실에 갔다 동행했던 수사관 김모씨의 만류를 뿌리치고 창 밖으로 투신했다”면서 김씨 등 담당 수사관 2명을 직무태만 등으로 자체

징계하는데 그쳤다. 이어 88년에는 공소시효 만료(88년 10월18일)를 앞두고 서울지검 형사1부에서 재조사를 했지만 “증거가 없다”며 수사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이 타살로 결론이 나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끝나 사건 조작 은폐와 관련된 당사자들을 처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과거 정보기관에 의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이들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하고 진상규명을 통해 도의적인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오기자young5@hk.co.kr



현장감찰조사에 참여했던 최종길 교수 사망직후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 최교수 사건은

1973년 10월19일 오전 1시45분경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가 중앙정보부 남산 합동심문실 건물 앞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이후 최 교수의 죽음은 국내 ‘의문사 1호’로 기록된다.

최 교수가 ‘유령 거점 간첩단 사건’의 참고인으로 당시 감찰실 직원이었던 동생 종선씨와 함께 자진출두한지 3일만의 일이다. 최 교수는 출두하기 직전 서울법대 교수회의에서 “총장과 교수진이 유신시대 시위로 체포된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만큼 ‘10월 유신’으로 서울이 떠벌던 군사독재정권에 비판적인 지식인이었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최 교수가 간첩임을 자백한 뒤 죄책감으로 중앙

73년 中情 출두 3일후 변사체로

정보부 건물 7층 화장실에서 투신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이듬해인 74년 12월18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최 교수 추모 미사에서 “그의 죽음은 전기 고문에 따른 심장 파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88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최 교수가 만류하는 중앙정보부 직원을 뿌리치고 화장실에서 투신했다”고 결론짓고 관련 직원을 판리소출로 문책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말 유가족으로부터 진정을 접수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梁承圭)는 올 8월20일 당시 수사 기록과 중앙정보부 수사관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최 교수가 간첩이라고 자백한 사실이 없고 사체 영검이 부분에 명문 흔적이 발견되는 등 조사 과정에서 고문을 당한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천유기자jutdae@hk.co.kr



“의문사 최종길교수 수사관이 7층서 밀어”

규명위 “당시中情간부, 타살가능성 증언” “현장검증도 조작”... 이후락씨등 소환될듯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간첩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의문사한 서울대 법대 최종길(崔鍾吉·사진·당시 42세) 교수가 조사도중 스스로 뛰어내려 숨졌다는 중정 발표와는 달리 수사관들이 중정 7층에서 밀어 떨어뜨렸다는 중정 간부의 증언이 나왔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梁承圭)는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 교수 의문사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당시 중정 간부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진상규명위는 사건 당시 중정 건물 7층에 있었던 중정 간부 A씨에 대해 지난 주 참고인 조사를 한 결과 “부하직원 B씨가 최 교수를 조사하던 차모씨 등 수사관들이 최 교수를

7층 옥외 비상계단에서 밀어 떨어뜨렸다”고 보고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또 “최 교수 사망 당일 현장검증에 참여했다고 기록된 관계자들이 실제로는 모두 불참했던 것으로 드러나는 등 현장검증중서도 완전히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진상규명위는 “A씨의 진술로 미뤄 당시 수사관들이 최 교수를 조사하고 문 등으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자살로 은폐하기 위해 건물밖으로 내던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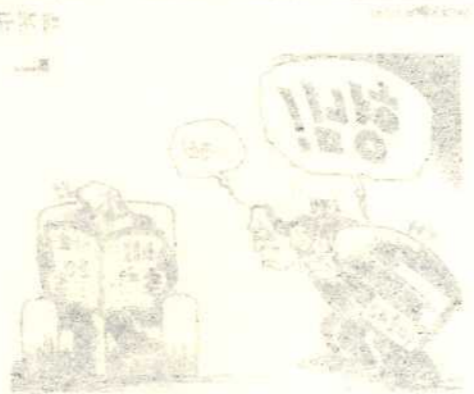
이에 따라 최 교수 타살 및 조직적인 은폐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당



시 지휘계통에 있던 김치열(金致烈) 차장과 이후락(李厚洛) 부장 등에 대한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지난 4일 이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으나 가족들이 “당사자가 치매를 앓고 있어 출두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진상규명위는 남아공, 영국, 일본 등 3개국 법의학자에게 최 교수 사인규명을 의뢰, 이중 2개국 법의학자들로부터 답신을 받아 분석 중이며, 이 달 말께 조사를 마무리하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타살 의혹’ 풀 결정적 단서

최종길교수 死因규명 새국면

규명위 “이후락씨등 조사 관철” 공소시효 끝나 처벌은 힘들 듯



故 최종길 교수

28년간 사인(死因)을 두고 의혹이 제기돼온 고(故)최종길(崔鍾吉) 서울대 법대 교수의 사망 상황을 밝혀내는 데 있어 주목할 만한 전 중정정보부 간부의 증언이 나오며 따라 최 교수 사건 진상 확인 작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1년간 최교수 사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진행해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제 당시 중정의 최고책임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차례”라고 밝혔다.

◇진실 규명 이뤄질까—위원회측은 최교수의 타살 여부를 밝혀줄 수 있는 결정적 단서가 포착됨에 따라 당시 중정 관계자 5, 6명을 대상으로 조사의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상임위원 김형태(金亨泰)변호사는 “A씨 진술의 사실성을 확인해줄 수 있는 당시 중정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변호사는 “특히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과 김치열 차장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를 관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측은 이들의 진술과 최교수 사망에 대한 법의학 분석 등을 종합해 이달 말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교수를 조사했던 車모(75)씨 등 당시 수사관들은 A씨의 진술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진상의 완전한 규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A씨에게 최교수 타살 상황을 전했다는 부하직원은 이미 사망한 상태다.

최교수가 중정 수사관들로부터 타

살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해도 현행법상 당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다. 살인사건의 공소시효(15년)가 88년 10월로 끝났기 때문이다.

◇조사 접수 및 진행—지난해 11월 진정을 접수한 위원회측은 사건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기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기록, 1988년 검찰 조사 기록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면서 관계자들을 찾아다녔다.

위원회 직원 2명이 미국·유럽

등을 찾아다니며 만난 사람만도 6백여명. 주로 당시 중정 관계자들의 증언을 듣기 위한 것이었다.

◇최교수 의문사 사건—교수 재직 중인 73년 10월 16일 중정이 조사 중이던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의 참고인으로 중정 남산본실에 자진출두했다가 사흘 만에 변신체로 발견됐다.

사건 직후 중정측은 “최교수가 간첩 사실을 시인한 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중정 건물 7층 화장실에서 투

신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88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를 벌였지만 진상 규명에 실패했다. 남궁욱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아버지 타살 의심한적 없어”

최교수 아들 광준씨

사건 당시 열살이었던 최종길 교수의 아들 최광준(37·경희대 법대 교수·사진)씨는 10일 “위원회의 발표는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가 타살됐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한번도 의심하지 않았다”며 공권력에 의해 가장을 잃은 것만으로도 모자라 빨갱이 가족으로 몰려 비참한 생활을 해야 했던 지난 28년을 애기했다.

받아들이던 광준씨를 비롯, 최교수의 부인 백정자(66)씨와 딸 희정(34)씨 등 유가족은 그동안 진상 규명을 위해 눈물나는 노력을 해왔다.

1998년 최교수 25주기 추모식을 계기로 “어느 법대 교수의 죽음: 최종길 교수를 추모하며”라는 추모집을 내고 99년부터는 추모 홈페이지(humankorea.or.kr)도 운영 중이다.

지난해 11월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사건 조사를 의뢰하며 마지막 희망



“지난 세월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중정 요원들이 늘 집을 감시했고 학교마저 쫓아다녔습니다.”

다. 몇번이나 전학을 해야 했지요. 그러다 어머니랑 여동생은 끝내 94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밝혀진다면 더 이상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손민호 기자 <ploveson@joongang.co.kr>

73년 의문사 최종길교수 “수사관이 7층서 떠밀어”

진상규명위, 당시 中情직원 진술 확보

1973년 중앙정보부 ‘유럽 거점 간첩단’ 수사 도중 의문사한 서울대 법대 최종길(崔鍾吉·당시 42세)교수가 중정 수사관에 의해 건물에서 떨어져 숨졌다는 주장이 당시 중정 직원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됐다. <관계기사 26면>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梁承圭)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 당시(73년 10월 19일) 중정 건물 7층에서 야근 중이던 A씨로부터 최근 ‘당일 오전 1시45분쯤崔교수를 조사하던 車모씨 등 수사관들이 그를

7층 비상계단 난간에서 밀어 떨어뜨려 숨지게 했다’는 내용을 부하직원에게서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A씨에게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는 부하 직원은 83년 숨진 상태다. 위원회는 또崔교수가 사망한 뒤 중정이 작성·제출한 현장검증 조서를 비롯,崔교수에 대한 긴급구속장·압수수색영장·피의자 신문조서 등 관련 공문서가 허위 작성된 사실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중정 요원이崔교수에 대한 고문 사실을 은폐하려 숨지게 했을 가능성이 한층 커지면서 중대한 국면을 맞게 됐다. 위원회는 A씨의 진술이 추가 증언·증거 수집을 통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소시효 만료(88년)에도 불구하고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에 관한 국제조약’에 따라 관련자 처벌을 건의할 방침이다. 손민호·남궁욱 기자 <ploveson@joongang.co.kr>

‘의문사 규명’ 공소시효 없다

‘의문사 1호’로 꼽히는 서울대 최종길교수가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가 수사관들에 의해 ‘비상계단에서 떠밀려 숨졌다’는 당시 중정 수사관부의 진술이 나와 주목된다. 따라서 이 진술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권력에 의한 사건 조작과 은폐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로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 것이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간첩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투신 자살’한 것으로 돼 있는 최교수의 사인은 당시 중정의 발표와는 달리 당시 수사관 2명이 최교수를 7층 조사실 옆 비상계단에서 건물 밖으로 떠밀어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규명위는 또 당시 수사관들에 의해 최교수는 고문을 당했으며 최교수에 대한 구속 영장은 물론이고 사망현장 검증조서, 사망진단서 등 5건의 서류는 모두 허위로 작성됐음

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28년만의 증언에 대한 진위 여부를 우선 가려야 하겠지만 왜 최교수 사망과 관련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됐을까. 규명위는 앞으로 당시의 중정 고위 관계자들이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연루되었는지 사후 수습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도 자세히 밝혀야 한다. 이 사건은 지난 1988년 서울지검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재조사를 했지만 ‘증거가 없다’며 수사 중단을 발표했었다. 국내법상 이 사건이 타살로 결론이 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 관련자를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공권력에 의한 ‘타살’이라면 공소시효에 구애될 것이 없다고 본다.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반인륜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배제 국제협약도 있다. 지금은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中情서 의문사 최종길교수 수사관이 7층서 떠밀었다”

73년 당시 中情간부 “타살 가능성” 첫 진술

1973년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간첩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숨진 서울대 법대 최종길(崔鍾吉·당시 42세·사진) 교수의 의문사 사건을 조사해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梁勝圭)는 10일 최 교수의 타살 가능성을 밝혀줄 중요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형태(金炯泰) 규명위원회 제1 상임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최 교수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당시 중정 간부급 요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한 결과 타살 가능성을 제기하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 간부급 요원은 “최 교수가 사망한 당일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한 수사관이 ‘당시 최 교수를 조사했던 수사관에게서 최 교수를 7층 외벽 비상계단에서 밀어버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나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그동안 최 교수의 타살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되긴 했지만 당시 중정 직원에 의해 타살 가능성에 관한 진술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위원회는 이 간부급 요원의 진술

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당시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 수사를 지휘했고 최 교수 사건이 터졌을 때 내부 조사를 주도한 핵심 인물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간부급 요원에게 보고한 수사관은 이미 사망했으며 당시 최 교수를 비상계단에서 밀었다는 수사관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최 교수가 비상계단에서 던져졌을 때 고문을 심하게 받아 가사 상태였는지, 아니면 이미 숨져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본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법의학자들에게 그 당시 최 교수 부검 자료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당시 중정이 작성한 현장검증조서, 긴급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등 5건의 서류가 허위로 작성됐음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달 말 최 교수 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이르면 다음달 초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당시 중정은 “최 교수가 1973년



10월19일 오전 조사를 받던 중 간첩 혐의 사실을 자백한 뒤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 남산 분실 7층 화장실 창문에서 뛰어 내려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최 교수의 타살 의혹은 최 교수가 북한 공작에 연루된 것이 아니라 중정의 공작에 휘말려 이에 저항하다 숨졌다고 본보가 잇따라 단독 보도(10월19일자 A31면·10월22일자 A30면)하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본보는 당시 최 교수의 시체 현장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 사진이 부검 감정서 및 부검사진과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중정이 최 교수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투신 현장 자체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본보는 또 중정이 최 교수를 상대로 장기간 공작을 벌여온 사실을 최 교수의 자필 자술서 등을 토대로 보도했었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中情 조작은폐 조사 불가피

최종길(崔鍾吉) 전 서울대 법대 교수가 타살됐음을 시사하는 중앙정보부 간부급 요원의 진술이 확보됨에 따라 최 교수 의문사 사건을 중정이 조작 은폐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와 함께 당시 수사 책임자들에게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급물살 타는 조사=그동안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최 교수 사건을 놓고 고문치사나 고문을 피할 목적 또는 모욕적 수사 방식에 항거한 투신자살 등으로 조사 방향을 맞춰 왔다.

그러나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진술이 나오며 따라 위원회의 조사 초점은 최 교수가 창 밖으로 던져질 당시 생존해 있었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고문치사를 은폐하고 이를 추락사로 보이게 하기 위해 일부러 숨진 최 교수를 밀어 버렸을 가능성에 위원회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문도 남는다. 위원회는 진술을 한 간부급 요원이 수사 라인의 핵심 중 한 명이었다고 말했다. 최씨를 비상계단에서 밀었다는 수사관도 이 사람의 지휘를 받았다.

그렇다면 간부급 요원이 이 사실을 담당 수사관에게서 직접 듣지 않고 한 사람을 건너 들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 요원이 다른 진술도 했지만 아직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파장과 전망=만약 타살로 확인될 경우 중정의 조작과 은폐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당시 중정 고위 간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당시 중정 이후락(李厚洛) 부장과 김치열(金致烈) 차장에

최종길교수 "타살" 첫 진술

고문치사를 추락사로 위장한듯

당시 간부 처벌 현행법으론 어려워



김형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제1상임위원이 10일 기자회견에서 최종길 교수가 화장실에서 투신 자살했다는 중앙정보부의 당시 발표를 반박하는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다.

게 4일 소환장을 보냈지만 두 사람 모두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고 통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타살로 결론나더라도 당시 중정 간부들에 대한 처벌은 공소시효가 지나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에 관한 국제조약'을 원용해서라도 혐의가 드러나면 법적 처벌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교수 의문사 사건=최 교수는 서울대 법대에 재직하던 1973년 10월 16일 당시 중정 감찰실 직원이던 동생 종선씨와 함께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의 참고인 자격으로 중정 남산

본실에 자진 출두했다. 그러나 최 교수는 출두 사흘 만인 19일 오전 1시 45분경 남산본실 구내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됐다.

중정은 약 1주일 뒤인 25일 간첩단 사건을 발표하면서 최 교수에 대해 "서독 쾰른대 유학중 북한에 포섭돼 평양에서 20일간 간첩교육을 받았으며 이를 자백한 뒤 양심의 가책을 느껴 화장실 창문을 통해 투신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김철은 88년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등의 고발로 재조사를 했지만 진상을 밝혀내지 못했으며 유족들은 지금까지 계속 진상 규명을 요구해 왔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28년만에 '他殺 가능성' 첫 증언 추가증언 나와야 진상 밝혀질듯

'崔鍾吉교수 의문사' 조사 어떻게 되나

28년 이상 의문사(疑悶死)로 남아있던 고(故) 최종길(崔鍾吉) 서울 법대 교수의 사인을 밝혀낼 단서가 될 수 있는 전 중앙정보부 간부의 증언이 나왔다.

◆사건 개요

최 교수는 서울대 법대에 재직하던

지난 73년 10월 16일 당시 중앙정보부 감찰실 직원이던 동생 종선씨와 함께 중정 남산본실에 자진출두했다. 중정이 조사 중이던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의 참고인 자격으로였다.

최 교수는 출두 3일 만인 19일 오전 1시45분경 남산본실 구내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됐다. 중정은 그로부터

6일 뒤인 25일 '유럽 거점 대규모 간첩단' 사건을 발표하면서 최 교수에 대해 "서독 쾰른대 유학 중 포섭돼 동독을 거쳐 평양에 가 20일 동안의 간첩교육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구속조사를 받고 있었다"며 "그는 이 같은 사실을 자백한 뒤 양심의 가책을 받고 화장실 창문을 통해 투신 자살했다"고 밝혔다.

◆진실은 중정 직원 입에 달려

최 교수의 사망과 관련된 중정 수사 라인 관계자는 5국10과(공작과) 수사관 10여명과 계장·과장·단장·국장·차

한 문제의 중정 직원 진술은 지난달에 나왔고, 이 직원은 지금까지 다섯 번 정도 소환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도 남는 의문점들

규명위는 10일 첫 타살 관련 진술을 한 전직 중정 간부가 "세상을 떠난 부하로부터 들은 말"이라고 밝혔으나, 이 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줄 사람은 고인(故人)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건의 진상은 미궁(迷宮)을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규명위는 또 사건 당사자들의 실명이나 동 사건 관련자들의 인력사항을

결정적 증언자 숨겨 진실규명 한계 당시 中情수뇌부도 알았는지 밝혀야

장보·차장·부장 등 모두 20명 정도가 된다. 지금까지 소환된 중정 관계자는 모두 80여명.

중정 수사라인 관계자 소환은 10일 현재 당시 차장보까지 마친 상태이며, 당시 김치열(金致烈) 차장과 이후락(李厚洛) 부장은 이날 6일 출석 예정이었으나, 건강상 이유로 들어 불참했다. 중정 관계자들은 대일신문에서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진술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내가 그럴 줄 몰랐다", "왜 거짓말을 하나", "시대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 사인과 관련

일절 공개하지 않은 채 관련자들의 주장만 공개했다.

또 당시 중정 부장과 차장 등 고위 간부들이 이 사건의 진상을 알았을 가능성도 앞으로 밝혀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중정(현 국정원)의 조직 특성을 감안할 때 이 정도 사안이 고위층에 보고되지 않았을 개연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규명위는 지금까지 조사부 이뤄지지 않은 당시 중정 이후락 부장과 김치열 차장에 대한 조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朴美림기자 ycpark@chosun.com

"죽음의 진실 이제야 드러나"

崔교수 유족들 반응

73년 발생한 서울대 법대 최종길(崔鍾吉·당시42세) 교수의 의문사 사인(死因)과 관련, '타살 가능성'이 있다는 당시 중정 직원의 증언이 나오자, 유가족과 동료 교수 등 지원자들은 "28년이나 걸린 노력 끝에 이제 드디어 일이 바로 잡혀가고 있다"며 환영했다.

사고 당시 10세 소년이었던 아들 광준(光準·37·경희대 법대 교수)씨는 "반공주의자인 아버지가 간첩이었다는 중정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였다"며 "그간 중정의 감시가 삼해 진상규명 요구는 고사하고 추모미사도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사고 당시 중정에 근무하며 형을 참고인 자격으로 자진 출두시킨 장본인인 종선(鍾善·53·재미 사업)씨는 본지와와의 전화통화에서 "81년까지 형의 죽음 뒤에 숨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호랑이 굴'에 남아 숨죽이고 근무해야 했다"며 "이 사건의 진실은 이미 수학에 입학선언과 입학보통을 통해 대부분의 진실이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최종길 교수 고문치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추진위원회의 공동대표인 서울대 법대 백충현 교수는 "가장을 잃은 충격에도 굴하지 않고 끈기있게 가정을 지탱해온 부인 백정자씨와 가족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하늘이 감동한 것 같다"고 했다.

/羅希弘기자 wily@chosun.com

최종길교수 '타살' 첫 내부진술

'최초 의문사' 규명되나

지난 73년 중앙정보부에서 간첩 혐의로 조사를 받다 숨진 당시 서울대 법대 최종길(사진) 교수가 조사 도중 스스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는 중정 발표와는 달리 수사관에 때밀러 숨졌다는 진술이 나왔다.

11일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양승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규명위에서 조사를 받은 당시 중정 수사 책임자였던 모 간부는 "수사관들이 중정 건물 외벽의 7층 비상계단에서 최 교수를 밀었다는 얘기를 부하직원 모씨에게 했으며 이 부하 직원이 사건 당일 이 사실을 나에게 얘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최교수가 수사관들의 타살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규명위가 당시 최교수 수사라인 상에 있던 이 간부로부터 진술을 확보한 것은 지난달 말. 이 간부의 진술은 '간접 증언' 형식이지만 중정 내부인의 진술인 만큼 신빙성에 상당한 무게가 실리고 있



이 간부에게 최 교수 사망 당일 보고한 부하 직원은 이미 사망했다. 또 당시 최 교수 사건의 수사관으로서 이 부하 직원을 최교수 사

당시 중정 수사관이 "때밀러 숨졌다" 직접진술자 사망... 진실규명 한계

망 직후 중정 건물로 데리고 가 '최 교수를 때밀었다'고 말한 핵심 증언자는 현재 미국에 있으며 진술을 강력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명위는 최근 당시 중정에서 최 교수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조사서, 피의자 신문조사 등의 서류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후락 당시 중정부장과 김치열 당시 차장에게

다. 소환장을 지난 4일 발부했으나 이들은 소환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간부가 사건에 더 이상 연루되는 것을 꺼려 추가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데다 문제는 이러한 문서 조작과 중정의 조직적 은폐 등의 혐의가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최 교수의 타살을 확정할 결정적인 물증은 될 수 없다는 게 의문사진상규명위의 고민이다.

결국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이번 간접진술을 입증할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전까지는 최 교수 사건을 타살로 확정하기는 어려운 전망이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이달말쯤 지금까지의 수사를 종합,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

고할 계획이다. 한편 최 교수 사건은 최 교수가 지난 73년 10월16일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던 중 중앙정보부가 조사하던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의 참고인 자격으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간 뒤 3일만에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 지난 28년간 타살의혹이 제기돼온 사건이다.

김충남기자 utopian21@munhwa.co.kr

'타살' 최종길 교수 외아들 최광준 교수 "그들이 진실 밝히면 용서"

"용서할 준비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기 바랄 뿐입니다." 고 최종길 서울대법대 교수(1973년 사망 당시 42세)가 중앙정보부 직원에 의해 타살됐다는 본보의 특종보도가 나간 후 최교수의 외아들 최광준(38·사진·경희대법대 교수)은 "처음부터 아버지가 타살됐다는 것을 의심한 적이 없다"며 의외로 담담한 반응이었다. 그러나 지난 28년동안 그를 따라다녔던 아버지의 간첩누명으로 겪은 아픔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사건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광준씨는 아버지의 사망 이후 친구와 선생님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해 학교를 다녔던지나 옮겨다녀야 했다. "중정의 감시 속에 치른 장례식때는 문상객 한명 받지 못한 것은 물론 눈물도 물레 흘러야 했습니다. 천주교 장의구현사제단의 도움으로 명동성당에서 열린 1주기 추도식도 추적을 피하느라 골목길을 돌고 돌아 겨우 참석할 수 있었지요"

간첩의 아들이라는 의심에 찬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던 것에 비하면 중정의 감시는 오히려 나은 편이었다. 주변에 간첩의 가족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어머니는 어린 자녀들을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 이사 다니기를 계속했다.

어머니는 자녀들이 상처받을까봐 유달리 자상하고 다정다감했던 아버지와는 추억을 아예 얘기하지 않았지만 광준씨는 언젠가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혀준다는 생각을 한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비록 열살짜리 어린이었지만 아버지가 간첩이라는 걸 처음부터 믿지 않았습니다. 6·25때 미군 폭격으로 일했던 예기나, 부산까지 걸어서 피란갔던 경험을 이야기해주셨던 철저한 반공주의자인 아버지가 어떻게 간첩이 될 수 있었습니까"

결국 고등학교만 겨우 마치고 독일로 유학을 떠난 광준씨는 아버지의 은사였던 필름대 케겔 교수의 도움으로 법학을 공부하면서도 부친의 행적과 죽음의 내막을 알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케겔 교수와 미국 하버드대 연정연구소의 지인들이 1975년 당시 법무장관에게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항의서한을 보냈지만 우리 정부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부의 무용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타살이 명확한 상황이지만 정부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명예회복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광준씨는 형법상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15년)가

'간첩의 아들' 28년간 꼬리표 문상객 못받고 눈물도 물레 흘러 손가락질에 학교·집 옮겨다녀 진상규명은 나 아닌 국가가 할일

지났고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민법상의 시효(10년)도 이미 지났지만 국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국가가 아버지를 간첩이라고 발표한 것을 공식 정정하지 않았으므로 국가의 가해행위로 인해 받은 유가족의 정신적 피해는 197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광준씨의 주장이다. 또 국제인권법상 고문에 의한 살인(고문치사)과 같은 반인륜적 반인권적 범죄에 있어서는 시효가 없다고 그는 강조한다.

"사실 진상규명은 저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의 과제입니다. 이번에 진실을 다 밝히지 못해도 제2, 제3의 진상규명위를 만들어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우리 시대의 책무입니다"

그의 마지막 과제는 아버지의 학문 열정을 이어받는 것이다. 최교수는 당시 모교인 독일 필름대와 미국 하버드대에 남아달라는 제의를 받을 만큼 촉망받는 신진학자였다. 광준씨가 법학을 전공한 것은 평생을 법 연구에 바치고자 했던 아버지의 뜻이 이런 꿈을 잊었다는 각오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30년 가까운 세월을 참으며 버텨온 가족을 위로하는 것도 광준씨의 몫이다. 사고 당시 중정에 근무하며 형인 최교수를 자진출두시켰던 작은아버지 종선씨(53)는 "호



람이 굴'인 중정에서 1981년까지 곳곳이 근무하면서 끝내 진실을 알리는 수가를 출간하는 등 백방으로 애썼다. 남편을 잃은 충격에도 굴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며 광준씨와 딸 희정씨(36·재미)를 대학까지 공부시킨 어머니 백경자씨(66)의 헌신적인 모성애도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밑바탕이 됐다.

"지금 진상이 밝혀진다고 해도 아버지는 살아 돌아오실 수 없는데 우리 가족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다만 사건의 직접적인 관련자들이 지금이라도 양심선언을 통해 용서를 구하기 바랄 뿐입니다" 그는 현재의 의혹도 없어 모든 진실이 밝혀졌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할 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imsj@kmb.co.kr

"반공주의 아버지가 어떻게 간첩일 수가 있습니까"

사설

의문사 진상규명의 새 계기로

'국내 의문사 제1호'로 기록된 1973년 10월의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당시 42세) 사망 진상이 마침내 베일을 벗기 시작했다. 타살을 뒷받침할 만한 최초의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당시 중앙정보부가 '유럽 거점 간첩단사건'의 참고인으로 서울 남산 분실로 최교수를 연행, 간첩혐의를 조사하던 중 "그가 간첩임을 자백한 뒤 죄책감 때문에 7층 화장실에서 투신자살했다"고 발표한 지 28년 만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은 "수사관들이 그를 7층 옥외 비상계단에서 밀어 떨어뜨렸다"고 보고한 사실을 다른 중정 직원으로부터 전해들었다는 전직 중정 직원의 진술이 거의 전부인 만큼 타살로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따라서 이달 말 발표될 진상규명위의 최종 결론을 기다리는 것이 순서이기이다. 그러나 이는 끊임없이 제기돼온 타살 심증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계속돼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결정적 증언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교수의 '자살'이 조작된 것이었다는 정황은 의문사진상규명위의 다른 발표 내용에서도 여럿 감지되고 있다. 현장검증에 참여한 것으로 기록된 관계자들이 모두 불참했고, 부검감정서 내용도 허위로 판명되는 등 조작 은폐 사실이 일부 드러났다고 위원회측은 지적했다. 만약 중정이 의도적으로 최교수를 살해했음이 확인

될 경우 이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공소시효 만료(88년 10월18일)로 사법처리가 불가능해진 것과는 상관없이 일차적으로 최교수와 그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도의적 책임 추궁과 함께 진실은 밝혀진다는 사회정의 실현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할 명제다.

최교수가 사망한 해는 '10월 유신'이 단행된 이듬해로, 그는 "유신 반대 시위로 체포된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서슬퍼런 군사독재정권에 대해 향해 비판을 서슴지 않았던 대표적 지식인 중 한 명이었다. 그의 죽음 이후에도 수사기관과 군대에서, 더러는 여행이나 등산 중 의문사한 사람은 부지기수다. 2000년 1월 활동을 시작한 의문사진상규명위는 모두 83건의 의문사를 접수했으나 지금까지 진상이 밝혀진 것은 11건뿐이다. 이 가운데 위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인한 사망, 즉 '민주화 희생자'는 아직 2명에 불과하다.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문헌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반인륜적인 범죄를 근절하는 것이 근본 취지라고 할 것이다. 관계당국이 지체 없이 진실 규명에 나서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살아 있는 모두에게 그럴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崔교수 死因 짜맞추기 검찰 의혹

당시 中情감찰요원 시사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간첩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숨진 서울대 법대 최종길(崔鍾吉) 교수의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 당시 중정이 '짜맞추기식' 자체 감찰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교수 사건 당시 중정 내부 감찰을 맡았던 A씨는 10일 오후 본보 기자와 만나 "최 교수는 이미 자살한 것으로 결론이 난 상태에서 최 교수를 조사한 직원들의 잘못만 감찰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최 교수의 사인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은 채 사인을 자

살로 미리 단정지은 상태에서 직원들의 '직무 태만' 부분에 대해서만 감찰을 벌였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는 11일 "당시 중정의 감찰 기록을 보면 수사관들이 최 교수를 고문했다는 사실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고 단순히 직무태만으로 관계자를 징계하는 선에서 감찰을 끝냈다"고 밝혔다.

(민동용·박민혁기자) mindy@donga.com

김치열·이후락씨 곧 소환

의문사조사, 최교수死因 관련

중앙정보부 수사관에 의한 타살 가능성이 제기된 고 최종길(崔鍾吉) 서울대 교수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梁承圭)의 진상규명 작업에 적극협조 의사를 밝혀 조사가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진상규명위 사무실을 방문, 양 위원장 등과 만년 자리에서 "최 교수 사건은 물론 진상규명회가 조사 중인 여타 국정원 관련 사건 자료를 적극 제공할 것"이라는 뜻을 전달했다.

한편 진상규명위 김형태(金亨泰) 제1상임위원은 "당시 중정차장이던 김치열(金致烈)씨는 이번 주 중, 이후락(李厚洛) 당시 부장은 다음주 소환할 방침"이라며 "이들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한 뒤 방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영오기자young5@hk.co.kr



김용민의 그림마당
yongmin@kyunghyang.com

국정원 “최교수 의문사 규명 협조”

국가정보원은 지난 1973년 중앙정보부 조사 과정에서 숨진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 사건과 관련해 11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각종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한 고위간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진상규명위 사무실을 방문해 양승규 위원장과 김형태 상임위원을 만나 이런 뜻을 전달했다.

규명위 관계자는 “국정원측에서 최교수 사건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할

경우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이 간부에게 최 교수 사건을 비롯해 현재 조사중인 옛 중정 또는 안기부, 경찰 관련 의문사 사건의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정이나 안기부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직무상 비밀보호 규정 등을 들어 진술에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국정원측이 이 부분에서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최종길교수 타살’ 재조사 이후락·김치열씨 곧 소환 의문사 진상규명위

지난 73년 중앙정보부에서 사망한 최종길 서울대 교수의 타살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인을 확보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최교수 사인 조사가 조직적으로 조작·은폐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당시 이후락 중정부장과 김치열 중정 차장을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11일 “진실규명을 위해 당시 중정 수사라인의 최고위 관계자까지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면서 “지금까지 중정 관계자 20여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이후락씨와 김치열씨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지난 4일 이씨와 김씨에게 각각 소환장을 보냈으나 모두 건강상의 이유로 소환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건강상태를 입증할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한 뒤 병세가 심한 것이 확인되면 방문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창규기자 window2@kdaily.com

사설

반인륜범죄 심판에 시한없다

1973년 중앙정보부에 붙들려가 조사를 받다가 투신 자살한 것으로 발표됐던 최종길 당시 서울대 교수가 살해됐다는 내부의 증언이 처음으로 확보됐다고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가 밝혔다. 이제까지 드러난 내용으로 보아 최 교수 사건은 5공 때 발생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수지 김 간첩 조작·은폐 사건을 합쳐놓은 성격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무고한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행위 등을 통해 숨지게 했고, 죽은 사람에게 간첩혐의를 뒤집어씌워 육체뿐만 아니라 인격까지 살해했기 때문이다. 박종철씨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 전두환 정권은 당시 치안본부장과 대공수사 지휘부를 은폐 혐의로 구속했다. 수지 김 사건은 사건 발생 14년이 지나서야 재수사를 막은 혐의로 이무영 전 경찰청장 등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됐으나, 사건을 조작한 당시 안기부 지도부는 형사적 소추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국가기관에 의한 고문치사, 살인은폐, 간첩조작

등의 혐의가 짙은 최 교수 사건은 아직 심판의 초기 단계에도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사건의 전모를 밝히려는 최 교수 조사를 직접 담당했던 수사관들뿐만 아니라 이후라씨 등 당시 중앙정보부 지휘부에 대해서도 전면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공소시효가 가장 긴 살인 혐의를 적용하더라도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어렵다는 지적들도 있다.

우리는 의문사규명위가 제약된 권한을 갖고 이만큼 진상에 접근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현재의 여건에서 수십년이 지난 의문사의 진상을 밝히는 데는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의문사규명위의 권한과 활동시한을 대폭 늘려주거나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반인륜적 범죄를 구체화해 입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의문사 진상규명이 공소시효 소멸이라는 이유로 중단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사설

최교수 사인은 '공권력 타살'?

1973년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유령간첩단 사건' 관계로 조사를 받던 중 변사체로 발견된 최종길 전 서울대 교수가 중정 수사관들에 의해 타살됐다는 중정 간부의 증언은 너무나 충격적이다. 이 간부는 얼마전 의문사진상규명위에서 "당시 중정 건물 7층 비상계단에서 수사관들이 최교수를 건물 밖으로 밀어버렸다는 말을 부하직원에게서 들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비록 사건 가담자나 목격자의 직접 증언은 아니지만 이는 최교수가 공작정치 희생물로 공권력에 의해 타살됐을 것이라는 그동안의 심증을 더욱 확실하게 해주는 진술이다.

최교수의 죽음에 대해 당시 중정은 "그가 간첩임을 자백한 뒤 죄책감 때문에 7층 화장실에서 투신자살했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진상규명위의 조사 결과 최교수는 고문을 받았고 사건조서는 그가 사망한 뒤 작성됐으며 사망진단서, 현장검증조서, 사체검안서 등 사인과 관련된 핵심서류들이 모두 조작됐음이 판명됐다. 사건의 성격이나 최교수의 신분을 고려할 때 과연 이런 엄청난 일이 당

시 중정부장 등 최고위층에 보고되지 않고 이뤄질 수 있었을까.

'공권력에 의한 고의적 인권유린'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다. 지금이라도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착수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수사 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진상규명위에 의해 타살로 결론지어진 장준하 전 사상계 대표의 의문사 사건이나 인혁당·민청학련 사건 등에 대해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

문제의 심각성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행위가 과거 군사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데 있다. 국정원과 경찰이 공모해 만든 작품이 바로 수지 김 피살사건 내사중단이지 않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 중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가 전체의 30%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권력기관 종사자들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의문사규명 공소시효는 없다

'의문사 제1호'로 꼽히는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의 사인이 타살로 확인되어 가고 있다. 지금까지 최 교수의 사인은 그가 간첩임을 자백하고 죄책감 때문에 7층 화장실에서 투신자살했다는 중앙정보부(중정)의 공식발표가 전부였다. 그러나 당시 중정간부의 진술에 따르면 "1973년 당시 최 교수가 중정에서 조사를 받던 중 수사관 2명이 7층 비상계단에서 그를 밀어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사건발생 28년 만의 진술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막 드러나려는 순간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은 수사관들이 최 교수를 밀어 떨어뜨렸다고 보고한 사실을 다른 요원으로부터 전해들었다는 중정간부의 진술이 전부여서 타살이라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조사과정에서 당시 중정 발표와는 달리 최 교수가 간첩혐의를 자백한 사실이 없고 고문까지 당한 흔적이 발견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이미 타살에 의한 죽음이라는 심증은 굳어진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당시 중정이 내놓은 현장 검증조서가 날조되고 긴급구속영장·피의자 신문조서 등 관련서류도 모두 최 교수

가 숨진 뒤 작성된 것으로 밝혀냈다. 진상규명위가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조사에 성실히 임한 결과다.

우리는 진상규명위가 어렵사리 사인규명을 위한 결정적 증언을 얻어낸 만큼 보다 구체적인 정황증거 확보에 최선을 다하리라 믿는다. 무엇보다 사건 당사자들의 '양심선언'이 사건규명의 관건이지만 필요하다면 당시 중정의 주요간부들에 대한 조사도 성역없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의문사의 규명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억울한 죽음의 실체를 밝힘으로써 가족의 명예를 회복함은 물론 반인륜적 범죄를 근절하는 것이 그 근본취지다. 따라서 이들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사법적 처벌여부는 진상규명 다음의 문제일 뿐이다.

이달 말로 예정된 진상규명위의 최종 발표에서 최 교수의 죽음이 타살로 결론날 경우 전면적인 재수사는 불가피하다. 군사독재정권에 항거한 한 지식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정한 해원(解冤) 없이는 누구도 역사의 발전을 말할 자격이 없다.

사설

최교수 타살증언과 역사의 힘

지난 1973년 10월 중앙정보부에서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던 중 숨진 서울대 법대 최종길(崔鍾吉)교수는 '투신 자살' 했다면 당시 중정의 발표와는 달리 "수사 요원에 의해 7층에서 폐밀러 떨어졌다"는 중정 핵심 간부의 증언이 나왔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는 10일 당시 최 교수 사건 조사계통에 있던 A씨를 소환 조사한 결과 "부하 직원 B씨가 '최 교수를 조사하던 차모씨 등 2명이 7층 조사실 옆 비상계단에서 최 교수를 밀어 떨어뜨렸다'고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또 수사관들이 최 교수에 대해 잠안 채우기, 무릎 사이에 각목을 끼우고 꿰리기, 동동이 찢질 등 고문을 자행한 사실도 밝혀냈다. 뿐만 아니라 최 교수 조사 및 사망과 관련해 중정이 작성한 긴급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물론,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증조서 등 5건의 서류가 모두 허위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중앙정보부가 최 교수의 '타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규명위는 중정이 최 교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지 이틀째인 73년 10월18일 최 교수에게 간첩 혐의가 없다고 인정한 사실 등을 들어 '최 교수의 죽음은 중정의 공작'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타살'을 밝혀내는 데는 난관이 있을 수도 있다. 타살 사실을 상관 A씨에게 보고한 B씨가 사망한 데다 타살 혐의를 받는 수

사관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최 교수가 고문 끝에 사망했거나 가사상태에 빠지자 이를 감추기 위해 '투신 자살'을 위장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향간에 팽배해 있음을 규명위는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규명위는 또 중정의 조직적 은폐 혐의도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 이 문제에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당시 중정의 수뇌부 이후락(李厚洛)부장과 김치열(金致烈)차장은 규명위의 소환 요구에 '치매(痴呆)' 등 질병을 이유로 불응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들이 '정병(癡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의학적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가 최 교수 의문사 진상의 철저한 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이나 그 사실의 조직적 은폐는 '반인륜적 범죄'로 시효와 관계 없이 단죄돼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최 교수 '타살 증언'을 접하면서 '역사의 힘'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한다. 지난날 독재정권 아래서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뉘라서 감히 도도하게 전진하는 역사의 힘을 거스를 수 있는가. 역대 독재정권에 봉사해 왔던 권력기관들은 스스로 거듭나기 바란다. 그럴 수 있는 마지막 길은 장준하(張俊河)선생 등 그동안 슬하께 제기돼 온 '의문사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력하는 것이다.

정달영 칼럼



경찰청장과 국정원 대공수사 국장이 한 불운했던 여인의 죽음에서 비롯된 일들로 구속됐다. 국가 공권력의 상징과도 같은 그 직함들은 물론 최근까지의 것일 뿐 현직은 아니다. 여인의 죽음 역시 14년 전의 것이다. 한 때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세를 누리던 당시의 국가안전기획부장도, 차장도 줄줄이 검찰에 불려나오는 중이다.

흔히 의문사 1호로 불리는 최종길 교수의 죽음이 발표된 대로 자살한 것이 아니라 타살이었다는 내부 증언이 공개되고, 가해자도 당시 중앙정보부의 수사관들이었을 것으로 지목됐다. 보도들은 살해 진상과 조직적 은폐 의혹을 밝히기 위해 당시 중앙정보부장과 차장의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이후락, 김치열이 그 이름들인데, 건강때문에 출두는 불가능하다는 가족들의 말도 전하고 있다. 거의 29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의 진실을 드러내는 일에는 지금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매달려 있다.

두 죽음과 관련한 이들 작지 않은 뉴스는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 전해진 것이다. 인권의 날을 장식한 풍경으로서 매우 상징적이다. 중앙정보부, 혹은 국가안전기획부, 요즘은 국가정보원인 이 '음습'한 국가기관과 유관한 일들

이 그 한 꼬투리라도 '양지'로 풀려나와 마침내 진실을 드러내게 되리라고 그 누가 믿을 수가 있었다는 것일까?

그러지 않아도 근래 우리의 국정원은 만신창이다. 14년 전, 29년 전에 지나간 일의 업보만이 아니다.

무슨 무슨 '게이트' 마다 현직 고위간부들의 개입설이 튀어나왔고, 아직도 얼마든지 들먹거릴 개연성이 있다. 경제단장이며 경제과장이며 하는 '경제'간부들이 잇달아 구속되고, 그들을 지휘하

국정원이 앞장 설 일

는 고위간부의 이름이 자주 '몸통'에 비견되는 것으로 미뤄서는 일련의 스캔들이 단발적이거나 개인 차원의 비리가 아니라 보다 구조적인 데 닿아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몇몇 '게이트'의 주인공들이 벤처 기업인의 이름을 얻었던 젊은 세대라는 공통점도 그냥 지나치기는 어렵다. 구속된 경제과장이 총선출마자들에게 정치자금 제공했다는 이야기는 또 무슨 뜻인가.

야당이 제기한 검찰총장 탄핵 소추안이 희한한 처리과정을 거쳐 '무산'되자 향간에는 "무산된 것이 아니다. 실제로는 '그들 모두'가 탄핵된 것"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 자민련, 사회당을 잡은 국회의장등 모든 정치권과 '살았다'고 한숨쉬는 검찰이 싸잡아 '탄핵 감'이며, 국민정서로 이미 탄핵이 되었다는 논리다. 그리고 그 정서로는, 국정원을 진짜 탄핵 대상에 추가해야 옳다.

지나간 시대 모든 정부기관에 '출입'하던 기관원을 기억한다. 그들이 하는 일은 통상적인 정보 업무를 훨씬 뛰어넘는 '국정운영 전반'이었고, 이런 성향이 스스로 권력화하면서 '정치개입'을 낳는 등 부패의 토양이 되었다.

중정이 무소불위로 손닿지 않는 곳이 없게 된 데에는 중정을 창설한 당시의 정치권력이 그같은 역할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거기서 필연적으로 초래된 것이 최종길 교수의 살해이고, 장준하 선생의 살해이며, 하다못해

수지 김 살해사건의 은폐에 이르기까지의 '만악(萬惡)'이다.

이제 이대로

는 국정원의 얼굴을 바로 들 수 없다. '과거'를 털어내고 새로 태어나는 분골(粉骨) 의식(儀式)없이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극대화한 국민불신 앞에서 더이상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진실을 밝히는 일에는 공소시효가 문제될 수 없다. 우리가 부끄러웠던 과거와 단절하기 위해서 용기있는 '증언'이 얼마나 요긴한 것인지도 이번 일로 확인됐다. 한 기관의 개혁에 그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시대 모든 이들의 진정한 끌어안음을 위해서, 국정원이 앞장서는 '진실과 화해'의 성사를 이제부터 보고 싶다.

/칼럼니스트 assisi60@hk.co.kr

양심적인 증언이 열쇠다

73년 중앙정보부에서 간첩단 사건의 참고인 조사를 받던 중 의문의 죽음을 당한 서울 법대 최종길 교수가 증정 직원들에 의해 타살됐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이 사건의 참고인인 당시 증정의 한 핵심 간부로 부터 이 같은 진술을 받아냈다고 한다. 암울했던 시기에 공권력에 의한 인권 압살의혹이 비로소 세상에 그 베일을 한 꺼풀 벗게 된다 면 다행한 일이다.

유신체제 아래서 자살로 결론 났던 이 사건의 조작 은폐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불가피해 졌다. 우리는 이 참고인의 증언이 단초가 되어 최 교수의 사인이 명백히 밝혀 지기를 희망한다. 이 사건은 혹독한 강압통치체제 유지를 위해 공권력이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은 패륜적 범죄 행위이다. 두 번 다시 이런 비극적인 일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진상만은 꼭 밝혀야 한다.

이 증언에 따르면 증정 수사관들이 최 교수를 7층에서 밖으로 떠밀었다고 한다. 이마도 이 때 최 교수가 이미 고문으로 사망했거나, 회복 불가능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이 자살로 가장하기 위해 최 교수를 건물 밖으로 내던진 게 아닌가 추측된다. 비록 사후라도 그의 억울한 죽음에서 교훈을 찾는

일이야 말로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의무이다. 하지만 아직은 진상조사를 위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역사적 과오를 숨기려는 세력들이 지금도 견재한 실정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최 교수에 대한 사망현장 검증조서, 사망진단서 등 5건의 중요 서류가 모두 허위로 작성됐다는 사실이다. 또 증언자는 수사결과 최 교수는 연행 이틀 만에 간첩단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증정이 체제유지를 위해 최 교수를 관제 빨갱이로 만들려 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 사건에 관련이 있는 인사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다. 당시 관계자들의 양심적인 증언과 고해는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된다. 많은 관계자들이 양심적인 증언 대열에 나서야 할 까닭이다.

폭압체제가 양산한 억울한 죽음은 이 뿐만이 아니다. 등산 도중 의문의 실족사한 것으로 결론이 난 장준하 선생의 사인도 우리가 다시 재조명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의문사 가운데 하나다. 일제 하에서는 항일독립운동을, 광복된 조국에서는 반독재 투쟁으로 일관한 장 선생의 사인도 독재 권력에 의한 타살의혹이 짙다. 역사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양심의 고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時論



洪準亨

으로 판명되었다. 피해자 본인들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누명까지 뒤집어 쓴 채 온갖 고초를 겪어야 했던 유가족들의 피맺힌 한은 그 무엇으로도 들어줄 수 없을 것이다.

현대법이 지닌 가장 근본적인 딜레마 중 하나는 논리적 완결성을 거부하는 그 어떤 법체계도 정작 국가 자신의 범죄는 잘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침략전쟁이나 집단인종학살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와 권력의 상충부에서 자행되는 전횡과 부정부패, 법의 장막 뒤에서 벌어

한번 저질러지고 은폐된 범행을 밝혀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 두 가지 사건은 여실히 보여주었다. 길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구가하고 있으나 국가와 정부, 권력의 추악한 과거가 아직도 제대로 청산되지 못하고 있음이 아닌가. 간첩혐의는 권력이 상시 예용한 이데올로기적 용수였다. 국가 자신의 범죄에 가담한 자들은 나름대로 충성을 빌미로 침묵의 면죄부를 부여받고 조용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은 어느 범죄보다 훨씬

살인대 역을하게 죽은 고은들에게 사죄라도 하고 가야 하지 않겠는가.

더 많은 억울한 죽음 밝혀야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 최종길 교수 사건을 밝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나 수지 김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의 성과는 평가할 만한 일이다. 범죄에 가담한 자나 진실의 은폐에 간여한 사람들을 색출하여 처벌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아직도 의혹에 싸여 있는 더 많은 의문사 사건들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 남아 있다. 의혹은 이 두 가지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연장해 서라도 아직도 미궁에 빠진 의문사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시키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 등 권력의 더러운 과거를 반성하는 첫걸음도 필요하지만, 진상 규명의 정도와 내용에 따라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는 방안도 빠놓을 수 없는 일이다. 진실을 밝혀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 광각의 늪에 빠질지 모른다는 절망을 딛고 피곤한 역정을 이겨낸 유가족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서울대 교수 행정대학원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문사' 권한 강화를

지는 정치적 억압과 인권유린행위 등 국법의 사정거리 바깥에 있는 범죄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국제적 협력을 통해 처벌을 구하려는 시도가 없지 않았지만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하다. 공권력은 그러한 행위의 범죄성 자체를 부정하고 가담자들은 침묵하고 회피하게 마련이어서 진실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권력의 추한 범죄 드러나

이보다 앞서 북한 여간첩으로 알려진 채 1987년 숨진 '수지 김' 사건은 당시 안기부의 발표대로 '미모의 공작원을 내세운 총풍교민 납북기도 미수 사건'이 아니라 남편이 저지른 단순 살인사건

더 큰 이들의 죄악을 외면하였고, 피해자들은 허위의 빛에 갇혀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이제 두 가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니 철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사건에 간여한 사람들 가운데는 '그저 지나가는 한평생 편하게 살면 그만' 이런 생각으로 침묵할 지도 모르지만, 자신의 부끄러운 행적을 실토함으로써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용기있게 역사 앞에 겸허하게 나서야 할 것이다. 어차피 한 번 사는

“崔교수 타살 中情 윗선도 알았다”

의문사규명위 이후락씨 등 소환 再요구키로

사를 벌일 방침이다. 정호식 기자 <jjpol@joongang.co.kr>

1973년 중앙정보부의 최종길(崔鐘吉) 서울대 법대 교수 사인 조작 과정에서 당시 증정 수사 지휘라인에崔교수의 타살 사실이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당시 증정 지휘부가 사건 조작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梁承圭) 관계자는 11일 “‘증정 남산분실 7층 비상계단에서 수사관들이崔교수를 밀어 떨어뜨렸다’는 진술(본지 12월 11일자 1, 26면) 외에도 윗선에 이같은 사실을 보고했다는 단서를 여러 확보했다”고 말했다.

단서 중에는崔교수의 타살 사실을 처음 진술한 당시 현장간부 외에 또 다른 관계자의 진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현장간부 외에 지휘계통에 있던 사람들을 계속 조사 중”이라며 “이후락(李厚洛) 당시 중앙정보부장과 김치열(金致烈) 차장에 대해서도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지난 6일 1차 소환에 불응한 두 사람에게 다시 소환장을 보내고, 이들의 건강상 소환 조사가 어려울 때는 조사관을 보내 방문조

‘최교수 他殺’의 개연성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 연루혐의로 중앙정보부의 조사를 받다 1973년 의문사한 최종길 전 서울대 법대 교수가 고문 끝에 타살된 것이라는 전직 중정 간부의 증언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공개했다. 87년 남편에게 살해된 뒤 남파간첩으로 날조됐던 수지김 사건에 이은 충격적인 소식이다. 진상은 낱알이 밝혀져야 하며, 사실로 확인된다면 고인의 명예회복은 물론 국가차원의 진정한 사죄(謝罪), 상응한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조차 안 된다면 어느 국민이 이 나라에 자신의 생명과 나날의 삶을 의탁하려 하겠는가.

사건의 전모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현재로서는 “조사를 담당한 중정 직원이 최 교수를 7층에서 밀어 떨어뜨렸다고 말했다는 것을 다른 직원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전직 간부의 증언이 있을 뿐이다. 더욱이 이 말을 전했다는 직원은 오래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연성은 크다. 최 교수는 73년 10월 16일 간첩단 사건의 수사협조 요청을 받고 중정에 자진 출두한 지 사흘 만에 변사체로 발견됐다. 당시 중정은 “최 교수가 간첩단의 일원임을 자백한 뒤 양심의 가책을 받아 중정 건물 7층 화장실에서 투신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마치 “책상을 탁 쳤더니 억 하고 죽더라”는 박종철 사건 초기 수사발표를 연상케 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발표를 사실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더구나 진상규명위는 최 교수의 시신에서 분명한 고문의 증거들을 발견했으며, 간첩 혐의 자체도 최 교수가 독일 유학시절 중정이 파견한 공작원에 이끌려 동베를린행 열차를 한 번 잘못 탔다가 뒤집어쓴 것이라는 중간조사 발표를 한 바 있다. 정황상으로는 당시 정권이 서울대 법대의 시위를 도화선으로 번지기 시작한 유신반대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해 유신에 비판적이었던 최 교수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는 추정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최 교수 사건은 과거 폭압적 군부정권 아래에서 저질러진 가혹한 인권유린과 공작정치 실상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하지만 진상규명위는 강제수사권이 없다.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인사들을 소환할 예정이지만 소득이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진상규명위의 활동이 더이상 진척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수지김 사건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나서서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 최 교수를 공작 대상으로 선정하고, 간첩사건을 조작하고,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책임자가 누구인지 가려내야 한다. 공소시효를 따지는 것은 그 다음 일이다. 역사의 진실에는 시효가 있을 수 없으며, 과거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는 국민은 미래를 말할 자격이 없다.

“大學을 신앙처럼 사랑하던 사람”

의문사 崔鍾吉교수 추모집 출간준비

“한창 열정적으로 학문과 강의와 벗에 흥겹게 심취해 있었던 그때, 최 교수의 죽음이 왔다. 나도 울고, 학생들도 울었다.”(황적인·黃迪仁·전 서울대 법대 교수)

“최 교수는 독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 법학계를 이끌어갈 큰 재목으로 기대를 모았던 중견 학자였다.”(이부영·李富榮·한나라당 부총재)

“최 교수 사건의 진상 규명은 우리 사회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김근태·金槿泰·민주당 상임고문)

지난 73년 중앙정보부에서 간첩

혐의로 조사를 받다 의문사한 최종길(崔鍾吉)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를 기리는 추모 문집 ‘아직 끝나지 않은 죽음’(가제)에 실린 글들이다. 본지가 12일 단독 입수한 최 교수의 추모문집에는 학계와 정계, 시민단체 등 최 교수를 기억하는 지인(知人) 50여명이 필자로 참가하고 있다.

학계·정계등 50여명 참여

최 교수 추모 문집이 준비되기 시작한 것은 98년 10월 서울대에서 열린 최 교수 제25주기 추모식 때.



◇72년 유럽 여행 중 이탈리아 로마 트레비 분수 앞에서 찍은 고(故) 최종길 교수의 가족사진. 왼쪽부터 아들 광준(현 경희대 법대 교수), 딸 희정, 부인 백경자씨, 최 교수. /최종길교수 가족 제공

당시 추모식에 참여한 ‘최종길 교수 추모하는 모임(대표 이수성·李壽成)’ 회원들은 최 교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과 함께, 최 교수를 아끼고 좋아했던 각계 인사들의 글을 모아 책으로 내기로 뜻을 모았다. 46명의 필자로부터 글을 받은 추모 문집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그 결과와 최 교수의 사진 등 관련 자료를 포함시켜 출간될 예정이다.

김수환(金壽煥) 추기경이 문집의 추천사를 썼고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 김정남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이부영 한나라당 부총재,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이사장, 함세웅 신부, 김혜경·김재윤 서울대 명예교수, 최송화 서울대 법대 교수, 이시윤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장, 김철 숙명여대 교수, 김학준 동아일보 사장 등이 글을 썼다.

이들이 추억하는 ‘최 교수’는 “가끔 열변을 토해 놓고 나중에는 고개 숙이며 사과하는 소박한 사람(김재윤)이자, “처신이 조심스럽고 한국과 대학을 사랑하던 사람(이시윤)”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최 교수의 지인들이 추억하는 것은 최 교수의 지인들이 추억하는 것은 최 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다. 서울대 최송화 교수는 “최 교수의 대학 사랑은 가히 신앙 수준이었다”고 회고했다.

/白承宰기자 whitesj@chosun.com

辯協 “수지김-최종길교수사건 조속 규명을”

대한변호사협회(정재현·鄭在憲 회장)는 12일 인권주장을 맞아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인권 상황과 현안 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그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비참한 인권유린행위인 과거 국가안전기획부의 ‘수지 김 살해 은폐 조작 사건’과 최종길(崔鍾吉) 서울대 법대 교수 타살 의혹사건의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은 빠른 시일 내에 진실을 명백히 밝

혀야 하며 국가권력기관은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어 “국제관계에서 우리나라의 주권이 존중되지 않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주한미군은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에 대한 대한민국의 정당한 재판권을 따르고 용산 미군기지의 임의적 사용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수지김-최교수사건 등

비참한 인권유린행위”

변협, 진상규명 촉구

대한변호사협회는 12일 인권주간 기념 성명을 내고 “국가안전기획부가 1987년 피살된 수지 김을 간첩으로 매도하고 중앙정보부가 73년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를 살해하고도 자살한 것으로 위장한 것은 비참한 인권유린행위”라며 “국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속히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발족하고도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인권위가 독립기구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원과 예산 등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하며 변협도 인권위에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우승기자

‘최종길사건’ 검찰 목인의혹

73년 변사현장 안가고 조서...공안부서 변칙처리

88년 이후락씨 소환조사

1973년 숨진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 사건과 관련해 15년 뒤인 88년 검찰이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한 관계자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진정으로 이 사건을 재조사한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을 앞둔 88년 10월 이후락씨를 소환, 조사했다”며 “이씨는 당시 검찰에서 ‘간첩(최종길 교수)을 잡

은 것으로 보고받고 나중에 무신했다는 보고만 받았을 뿐 세세한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한편 당시 검찰은 최교수 사망 사건을 변사사건을 다루는 형사부나 당직 검사가 아닌 공안부에서 처리토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당시 공안부 검사가 변사사건 발생보고를 전화로 받고 지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검찰이 사건현장에 가지도 않고 현장검증 조서를 작성

했다는 의혹을 갖고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시 검찰이 현장 검증이나 부검 등의 사건처리에서 중정의 사건은 왜 조작에 동조했거나 적어도 목인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짚어 해주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최교수 변사사건을 처리한 0점사(현 변호사)는 “증정에서 일반 검사의 출입을 싫어해 공안부에 맡긴 것 같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뢰를 거쳐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원희복기자

wonhb@kyunghyang.com

‘시간이 묘약’이라는 말도 ‘진실’ 앞에서는 빛을 잃는다. 세월이 흘러가면 잊혀지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요즘 추이를 보면 세월이라는 묘약의 ‘약효 지속시간’도 점점 단축되는 느낌이다.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 장세동 전 안기부장... 사람들의 입에서는 ‘언젠각 이후락이 언젠각 장세동인가’라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 이미 오래 전에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해 이제는 기억에도 가물가물한 ‘그때 그 사람’들이다.

데스크 칼럼

김종구 민권사회2부장



‘역사의 백미러’

망각의 과거 진실케기

그 퇴역 배우들이 다시 역사의 심판대에 섰다. ‘검찰출두 최대 기폭’ 보유자라고 해도 좋을 장 전 안기부장의 낯익은 얼굴을 다시 보는 느낌은 묘하다. 그동안 정권이 몇차례씩 바뀌고, 그들이 몸담았던 조직도 두 차례나 간판을 바꿔달았지만 업보의 고리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올 한해도 이제 끝나기에 들어간 ‘평년’의 가장 분위기인지라, 과거의 진실들을 만나는 감회는 더욱 새롭다.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지 28년, 수지 김 피살사건이 일어난 지 14년. 그동안 ‘평년’은 되풀이됐지만 그렇다고 모두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은 아니었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감강한 정권은 기억의 연속성 위에서 가능하다. 때로는 망각이

정신건강에 좋을 때도 있지만 망각도 대상 나름이다. 그래서 ‘역사의 백미러’란 말도 나오는 모양이다. 앞만 보고 운전하다가 가는 자칫 사고가 나기 쉬우니 수시로 백미러(뒷거울)를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때로는 거울에 비치는 뒷풍경이 너무 참혹하고 가슴 아프더라도 그럴수록 눈을 부릅뜨고 보아야 한다. 지금 펼쳐지고 있는 ‘과거와의 대화’ 시간이 유용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그러나 진실은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지혜에 묻힌 진실은 언젠가는 스스로 폭발한다는 경우도 인간의 노력을 수반할 때만 가능하다. 조금씩 사건의 씨줄이 벗겨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감탄사를

연발할 수만은 없다. 당사자들의 덮어두기 작전도 짚고야. 장세동씨는 검찰에 나와 ‘책임 통감론’을 펼치며 특유의 배짱있는 면모를 보인 것까지는 좋았으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피해가고 있다. 상 황에 따라 편리하게 나타나는 고무줄 건강 증세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재발했다. 이후락씨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원통하게 죽은 수많은 영혼이 아직도 구원을 떠도는데, 그의 최대 관심사는 자신의 건강인 모양이다.

‘조직보호’라는 말로 포장된,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가식 행태도 쉽게 사라지지 않

는다. 의문사 진상조사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수사기관들의 비협조 문제도 아직 속시원히 해결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는다.

수지 김 사건에 대한 검찰의 내사 중단도 그런 미망의 결과물이다. 공화국 숫자머지 다른 먼 옛날에 일어난 사건이건만, 국정은 헛된 데 힘을 쓰다가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 도대체 ‘조직이 뭐길래’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건진 수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이 기관이 비록 예전보다는 못하지만 아직도 영향력이 건재하다는 점, 그래서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덮어두기로 또 미궁인가

아직도 길 길은 멀지만 하다. 당장 최교수 사건만 해도 완벽한 진실이 있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수없이 많다. 의문사규명위에 접수된 슬한 사건 중에는 아직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한 게 부지기수다. 그런데도 의문사규명위의 조사활동 시한(내년 4월20일)은 이제 무어 차오르고 있다. 그나마 현실적으로 내년 2월 말까지는 조사 활동을 마쳐야 할 형편이라고 한다. 길 길은 먼데 해는 서산에 걸린 형국이다. 또다시 진실을 어둠에 묻어놓은 채 발걸음을 여가서 멈춰야 하는가. kig@hani.co.kr

'공권력 살인' 국가에 무한책임

1973년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간첩 혐의로 조사받던 의문사한 최종길(崔鐘吉) 전 서울대 법대 교수가 수사관들에 의해 타살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사건은 87년 국가안전기획부가 여간첩으로 조작한 수지 金 피살 사건과 함께 국가 공권력이 가해 주체라는 점에서 피해자 명예 회복은 물론 어떤 형식으로든 국가가 배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사건 당시 중정 간부였던 사람에게서 "수사관들이 최교수를 7층 옥외 비상계단에서 밀어 떨어뜨렸다고 보고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또 당일 현장 검증 기록 등은 모두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최교수를 수사하다 고문 등으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자살로 꾸미기 위해 수사관들이 건물 밖으로 내던진 것으로 보인다. 계 진상규명위의 판단이다.

비록 간접 증언이기는 하지만 당시 중정 직원이 최교수의 타살 가능성을 처음으로 증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교수 사망 원인에 대한 무성한 의혹을 푸는 실마리를 찾은 셈이다. 인권 암흑시대에 발생한 각종 의문사 사건의 진실이 진상규명위 활동을 계기로 모두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최교수 의문사나 수지 金 사건을 단순히 과거지사로만 여겨서는 안된다. 국가정보원의 최근 행태를 보면 이름만 바뀌었을 뿐 예나 지금이나 별로 나아진 게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밝혀내 과거와 달라졌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 아울러 우리는 공권력의 반인권적 횡포에 대해서는 시효와 관계없이 정부가 배상을 포함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美, 최교수 타살 알고 있었다

그레그 전대사 "당시 경호실장에 항의"

의문사위원회, 美에 관련기록 요청키로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숨진 최종길(崔鐘吉) 서울대 교수가 타살됐다는 사실을 당시 미국도 알고 있었음이 밝혀져 의문사진상규명위가 미 국무부에 관련 기록의 공개를 요청키로 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 관계자는 13일 "미 대사관 정보책임자였던 도널드 그레그(사진) 전 주한 미 대사가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e-메일을 최근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그레그 전 대사는 위원회가 보낸 최교수 관련 질의에 대한 e-메일 답변에서 "한국 중앙정보

부가 최교수를 고문을 통해 죽이거나 고문을 피해 창밖으로 뛰어내리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박종규(朴鍾圭) 대통령 경호실장을 찾아가 항의했다"고 밝혔다.

그레그 전 대사는 또 "당시 최교수의 죽음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지만 현재 관련 기록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위원회 관계자는 말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미 국무부 풀린 파월 장관 앞으로 당시 미CIA 한 국지부와 미 대사관의 정보보고 등 관련 문서를 공개해 달라는 협조공문



을 보내기로 하고 외교통상부와 협의 중이다. 한편 최교수의 동생 종선(54·미국 거주)씨는 지난 3월 펴낸 책 『산자여 말하라』

에서 그레그 전 대사가 사건 당시 경호실장에게 "최교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데 그것은 범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위원회측은 "올해로 미 정부의 비밀 문서 보존시한인 30년이 가까워져 미 국무부가 관련 문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효식 기자

최종길교수·수지金 같은 억울한 죽음 다시는 없게...

反인륜범죄 '시효' 없애자

인권운동사랑방 등 시민·사회단체 폐지운동 법조계서도 '유엔 시효부적용 협약' 가입 여론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 사건과 수지 金 사건처럼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억울한 죽음이나 은폐·조작 등 반(反)인륜적 범죄에 대해 범의 공소시효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와 인권운동사랑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들 사건을 계기로 공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성역없는 조사와 진상 규명을 위해 공소시효 폐지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조계 등에서도 유엔이 전쟁범죄와 반인륜적 범죄의 예방 차원에서 1968년 11월26일 채택한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국제법상 시효의 부적용에 관한 협약'에 우리나라도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인권재단회장으로 공소시효 폐지운동을 펼치온 조용환 변호사

는 13일 "최교수 사건이나 수지 金 사건에는 국가권력이 범죄자 추적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공소시효의 기본 전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국가권력 스스로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들고, 더 나아가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공소시효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변호사는 "공소시효는 불법의 법적으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 대륙법계 법에서 적용되는 상대적인 것으로 극악한 범죄의 경우 시효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편집장은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 이은경

사무처장은 "의문사 사건 등에서 드러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가해자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다만 양심선언 등을 통해 진실을 밝힐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등 사면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의 김형태 상임위원(변호사)은 "국제협약 가입을 통해 이미 100여 국가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조약은 사실상 국제적 관습법으로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 최종길 교수의 아들인 광준씨(경희대 법대 교수)도 "국제인권법상 고문에 의한 살인과 같은 반인륜적·반인권적 범죄에 있어서는 시효가 없다"면서 "아버지 사건처럼 가해자가 국가인 경우 공소시효는 그 명을 통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정 강령수기자 nomad@kmb.co.kr

최종길 교수 기리는 추모문집 곧 나온다

지난 73년 중앙정보부에서 간첩 혐의로 조사받던 숨진 고(故)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를 기리는 추모문집이 조만간 출간될 예정이다.

추모문집은 지난 98년 10월 서울대에서 열린 최교수 25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최종길 교수 추모하는 모임(대표 이수성)' 회원들이 준비 중이며 평소 최교수를 곁에서 지켜본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이사장, 함세웅 신부 등 각계 인사 46명의 글이 실리게 된다.

최교수의 아들인 경희대 법대 최광준 교수(37)는 "문집발간에 참여하신 분들의 글을 통해 아버님이 얼마나 다정다감한 분이셨는지 느끼게 됐다"면서 "아버님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추모문집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최교수의 죽음에 대한 의문사진상규명위의 결과발표 시점에 맞춰 발간될 계획이다. 이학준기자 arisu@kmb.co.kr

최종길 교수 의문사 조사 이후락씨 “협조”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간첩혐의로 조사받다 의문사한 최종길 서울법 대교수 사건과 관련, 이후락 당시 중정부장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의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의문사진상규명위에 따르면 이 전 부장은 최근 진상규명위에 최 교수 의문사 조사에 협력할 뜻을 밝혀왔으며, 이에 따라 진상규명위는 이르면 이번 주내에 이씨 집을 방문조사할 계획이다.

이 전 부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들어 진상규명위 출두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규명위는 이달 초 중정 핵심 간부가 “최 교수가 중정수사관에 의해 타살됐다”는 간접증언을 함에 따라 당시 중정 수사라인 최 고위 관계자인 이 전 부장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이 전 부장과 함께 최 교수의 죽음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김치열 전 중정차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이날 오후 실시했다.

조사관 2명은 경기도 분당에 있는 김 전차장의 자택을 방문, 김 전차장을 상대로 ▲최 교수 사망 보고를 받았는지 ▲보고를 받았을 경우 보고의 내용 ▲사건은폐 시도 여부 ▲최 교수 사후 가족들을 상대로 진행된 회유와 협박에 참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황진영기자
buddy@sgt.co.kr

이후락씨 다음주 방문조사

의문사 규명위 최종길교수 사건관련 김치열 당시 중정차장 어제 방문조사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의문사한 최종길 교수 사건과 관련, 이후락 당시 중정 부장에 대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진상규명위는 27일 김치열 당시 중정 차장에 대해서도 방문조사를 시도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이날 “최근 이전 부장이 진상규명위 조사에 응할 뜻을 밝혀왔다”며 “이르면 다음 주중 이씨의 거처로 조사관을 보내 방문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 부장은 진상규명위가 보낸 2차례의 소환요구에 대해 지난 24일 대리인을 통해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건강

상 이유로 출석은 어렵다”며 “방문조사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한편 진상규명위는 27일 조사관들을

경기 분당에 있는 김치열 전 차장 자택에 보내 방문조사를 시도했으나 김씨가 집안에서 나오지 않아 직접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전차장도 건강상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이호승기자 bravo@kyunghyang.com

이후락씨 “조사 응하겠다”

당시 중정부장... 규명위 내주중 방문조사키로

지난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다 숨진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의 의문사와 관련해 이후락 당시 중정부장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의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음에 따라 다음주 중 이 부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규명위는 27일 “그동안 건강이 나빠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말해온 이 전 중정부장이 태도를 바꿔 방문조사에 응할 수 있다고 밝혀와 다음 주중 방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명위는 이달 초 중정의 한 간부가 최 교수가 중정수사관한테 타살됐

음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하자 이를 자세히 밝히기 위해 당시 중정 최고 책임자인 이 전 부장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다.

규명위는 또 이날 오후 김치열 당시 중앙정보부 차장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 위해 이날 오후 경기 분당의 김 전 차장 집으로 조사관 2명을 보냈으나, 김 전 차장이 출입문을 굳게 닫은 채 조사를 거부해 무산됐다.

규명위 관계자는 “공개조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조만간 비공개로 다시 방문조사를 시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최종길교수 의문사 관련 이후락씨 조사 협조 밝혀

지난 73년 중앙정보부에서 간첩혐의로 조사받다 숨진 최종길 서울대 법대교수의 의문사와 관련,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77)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의문사진상규명위 관계자는 27일 "이 전 부장은 최근 진상규명위에 최 교수의 의문사 조사에 협력할 뜻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 전 부장은 그동안 의문사진상규명위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두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다음주 초쯤 이씨의 주거지로 조사관을 보내 방문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진상규명위는 또 당시 중정 지휘계통상 이 전 부장과 함께 최 교수의 죽음에 관해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김치열 전 중정차장(80)을 방문 조사하려 했으나 김씨의 거부로 무산됐다.

●이광구기자 window2@kdaily.com

최종길교수 의문사 관련 이후락씨 "조사 응하겠다"

1973년 남산 중앙정보부에서 간첩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다 숨진 최종길(崔鍾吉) 당시 서울대 법대교수의 의문사와 관련, 이후락(李厚洛) 당시 중정부장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최 교수 의문사 진상 규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7일 의문사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이 전 부장은 최근 진상규명위에 최 교수 의문사 조사에 협력할 뜻을 밝혀왔으며, 이에 따라 진상규명위는 이르면 주내에 이씨의 거처로 조사관을 보내 방문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장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진상규명위 출두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규명위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진상규명위는 이날 당시 중정 지휘계통상 이 전 부장과 함께 최 교수의 죽음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김치열(金致烈) 전 중정차장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김씨의 거부로 무산됐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이후락씨, 의문사추 조사받기로

최종길 교수 사망 관련 김치열 前차장은 무산

이후락(李厚洛·사진) 전 중앙정보부장이 1973년 중정 조사 중 숨진 최종길(崔鍾吉) 서울대 교수와 관련,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梁承圭)의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27일 밝혔다.

이전 부장은 88년 천주교인권위의 고발에 따른 서울지검 조사에서 "최교수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투신했다고 보고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씨가 26일 오후 2시까지 출두해달라는 2차 소환에 건강상 이유로 출두가 어렵다고 밝혀 다



음주 집으로 방문조사를 하기로 하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씨가 조사에 협력할 의사를 밝히고

있어 조사가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문사위는 이날 김치열(金致烈) 당시 중정 차장의 경기도 분당 집으로 조사관들을 보냈지만 출입을 거부해 조사가 무산됐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이후락씨 곧 방문조사

의문사규명위, 최종길교수 死因관련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간첩 혐의로 조사를 받다 숨진 서울대 최종길(崔鍾吉) 교수의 의문사 사건을 조사중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당시 중정부장이던 이후락(李厚祿)씨에 대해 곧 방문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이씨가 대리인을 통해 '건강상 위원회에 직접 출두해 조사를 받기는 어렵지만 방문 조사에는 응할 수 있다'는 전갈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주 안에 조사관을 보내 이씨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당시 중정부장이던 김치열(金致烈)씨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 조사관 2명을 보내 방문 조사를 시도했으나 김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조사하지 못했다.

위원회 측은 "김씨가 차대 증세로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알려왔으나

최근 다시 알아보니 병원에서 퇴원하고 거동도 어느 정도 자유롭다는 것을 알고 사전통보 없이 방문조사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최종길교수 고문사망후 건물밖으로 내던져진듯”

의문사규명위 김형태위원 신동아 기고

1973년 중앙정보부 남산 대공분실에서 간첩 혐의로 조사를 받다 숨진 서울대 최종길(崔鍾吉) 교수는 심한 고문을 받고 이미 숨진 뒤에 건물 밖으로 던져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김형태(金炯泰) 제1상임위원은 18일 발간되는 신동아 2월호에 기고한 '중정은 최 교수를 살해하고 자살로 조작했다'는 글에서 최 교수가 타살됐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조사 결과 최 교수가 간첩이라는 주장은 중앙정보부가 꾸며낸 것이며 중정은 최 교수 사후 각종 서류를 위조하는 등 은폐조작을 시도했다는 당시 수사관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17일 "최 교수 의문사 사건을 여러 언론이 다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사실을 호도하려는 시도조차 있었다"며 "국민이 사건의 진상과 함의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글을 썼다"고 밝혔다. 김 위원의 글을 요약 정리한다.

골절상처 사망후 생긴것

▽시체의 '사후 손상 흔적' = 최 교수 시체 부검사진을 면밀히 조사한 국내외 법의학자들은 위원회에 '최 교수의 왼발 상처와 앞머리 골절, 양팔 골절, 골반골 골절은 다른 상처들과 발생한 시간에 뚜렷한 차이가 나며 그 차이는 생전과 사후로 구분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즉 이들 상처는 최 교수가 사망한 후에 생긴 것이라는 소견이다. 따라서 추락자에게 흔히 발견되는 골반골 골절 등이 최 교수 사후에 생겼다는 것은 최 교수가 이미 숨진 상태에서 건물 밖으로 던져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부검의는 사건 당일인 10월 19일 오전 궁정동 안가(당시 이후락 중정부장의 집무실이 있던 곳)로 불려가 (자신이 부검해야



동아일보 자료사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공개한 최종길교수 의문사 당시 현장.

할 시체가) "이곳 3층에서 떨어져 자살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위원회에서 진술해 중정 고위층이 최 교수의 사인을 자살로 규정했다는 의혹을 드러냈다.

'통닭구이' 고문 당한듯

▽고문 여부 확증 = 최 교수의 부검사진을 검토한 대다수 국내외 법의학자들은 엉덩이 부분의 상처와 다리 오금 부분의 상처는 시반(屍斑)이 아닌 피하출혈로 고문의 명백한 증거라고 진술했다.

최소한 길이 1m 내외의 각목으로 심한 매질을 당했고 '통닭구이' 고문을 자행한 것이 틀림없다는 소견이었다.

"서류조작" 고위간부 진술

▽사후 공문서 조작 = 당시 수사관 C씨는 "간담 구축장, 피의자 신문조서, 압수수색영장, 첩보보고서, 수사보고서 등 송치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는 최 교수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 다른 수사관 E씨는 "허위로 작성한 서류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으라는 지시를 당시 중정 고위간부 A씨가 했고 또 다른 고위간부 D씨의 묵인 하에 최종길을 간첩으로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뉴스추적」 '최교수 의문사' 다뤄

(서울=연합뉴스) 이명조기자 = SBS TV는 25일 밤 11시5분 「뉴스추적」 200회 특집으로 우리나라 의문사 1호로 꼽히고 있는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 죽음'의 진실을 추적, 보도한다.

「뉴스추적」 제작팀은 지난 98년 11월 주변의 증언과 법의학적인 접근을 통해 최 교수의 타살의혹을 중점 제기한데 이어 이날 아직 채 밝혀지지 않은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예정이다.

특히 제작팀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해말 밝힌 고문의 실체와 전 중앙정보부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소개하는 한편 그동안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최 교수의 부검기록서와 부검사진 등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mingjoe@yna.co.kr

(끝)

“최종길씨 고문死 가능성”

日 법의학자 소견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는 1973년 중앙정보부 남산 대공분실에서 간첩 혐의로 조사를 받다 숨진 최종길(崔鍾吉)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의 사인은 고문치사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법의학자 소견이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부검기록 등에 대한 일본 법의학자의 검토 결과 최교수 몸에 난 상처 중 일부는 숨진 뒤 생긴 손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엉덩이와 허벅지 등에 난 상처는 고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머리·가슴에 난 상처는 단순 추락사로는 설명되기 어렵다는 것이 법의학자 소견이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최교수는 고문으로 인해 숨진 뒤 당시 조사를 담당하던 중정 수사관들에 의해 건물 7층에서 아래로 던져졌을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남궁욱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일본 법의학자들도 “최종길교수 고문치사 가능성 높아”

상처일부 숨진뒤 생겨 부검기록 소견 보내와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지난 1973년 남산 중앙정보부에서 간첩단 사건 연루 혐의로 조사를 받다 숨진 최종길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의 사인에 대해 일본쪽 법의학자들도 고문치사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법의학자 소견을 보내왔다고 25일 밝혔다.

진상규명위의 한 관계자는 “부검기록 등에 대한 일본 법의학자의 검토 결과 최 교수 몸에 난 상처 중 일부는 숨진 뒤 생긴 사후손상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엉덩이와 허벅지 그리고 오금 부위에 난 상처가 고문에 의한 것이라는 일본 법의학자들의 소견은 당시 수사관들의 증언과 일치한다”며 “머리나 가슴에 생긴 상처 역시 단순한 추락으로 인한 것으로는 설명되기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게 이들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 교수 뇌 내부의 출혈은 전기고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이번 법의학자 검토 결과”라고 덧붙였다.

진상규명위는 지난해 초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일본 등의 법의학자들에게 최 교수의 부검기록 등을 보내 법의학자 소견을 요청했으며, 지난해 말 각국으로부터 조사결과를 받아 최근 번역작업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최종길 교수 전기고문死 가능성”

日 법의학자, 부검기록 검토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는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간첩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다 숨진 최종길(崔鍾吉) 서울대 법대 교수의 사인이 고문치사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법의학자

소견이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부검기록 등에 대한 일본 법의학자의 검토 결과, 최 교수 몸에 난 상처 중 일부는 숨진 뒤 생긴 사후손상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엉덩이와 허벅지 그리고 오금 부위에 난 상처

는 고문에 의한 것이라는 법의학자 소견은 당시 수사관들의 증언과 일치하며 머리나 가슴에 생긴 상처 역시 단순한 추락으로 인한 것으로는 설명되기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의학적 검토결과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최 교수 뇌 내부의 출혈은 전기고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이번 법의학자 검토결과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 교수는 고문으로 인해 숨진 뒤 당시 조사를 담당하던 중정 수사관들에 의해 건물 7층에서 아래로 던져졌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진상규명위는 지난해 초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일본 등 3개국의 법의학자들에게 최 교수의 부검기록 등을 보내 법의학자 소견을 요청했으며, 지난해 말 각국으로부터 조사결과를 받아 최근 번역작업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오기자

최종길교수 고문치사 가능성 커

日 법의학자 “전기충격으로 뇌출혈” 밝혀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지난 73년 남산 중앙정보부에서 간첩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다 숨진 최종길(崔鍾吉) 당시 서울대법대 교수의 사인이 고문치사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법의학적 소견이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진상규명위의 한 관계자는 “부검 기록 등에 대한 일본 법의학자의 검토 결과 최 교수 몸에 난 상처 가운데 일부는 숨진 뒤 생긴 사후손상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엉덩이와 허벅지

그리고 오금 부위에 난 상처는 고문에 의한 것이라는 법의학적 소견은 당시 수사관들의 증언과 일치한다.”면서 “머리나 가슴에 생긴 상처 역시 단순한 추락으로 인한 것으로는 설명되기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법의학적 검토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교수 뇌 내부의 출혈은 전기고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이번 법의학적 검토 결과 밝혀졌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창구기자

window2@kdaily.com

“최종길교수 전기고문으로 사망한 듯”

외국 법의학자들 소견서- “추락사로 보기 힘들어”

1973년 간첩단 연루 혐의로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 숨진 서울대 최종길(崔鍾吉) 교수의 사인이 “고문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외국 법의학자들의 부검 감정소견서가 공개됐다.

25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한 일본 법의학자는 “최 교수가 숨진 현장 사진을 감정한 결과 시신의 양복 윗옷 단추가 채워져 있고 건물과 평행으로 누워 있어 추락사체로는 생각되지 않는다”며 “현장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의학자는 최 교수의 부검 감정서를 검토한 결과 “시체 머리의 ‘경막하출혈’은 몸이 고정된 상태에

서 전기를 통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상처로 전기고문의 흔적으로 보인다”고 감정 소견을 밝혔다.

규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일본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3개국 법의학자들에게 당시 국내 부검의가 작성한 최 교수 부검감정서와 부검 사진 등에 대한 감정을 의뢰해 그 결과를 12월 말 통보받았다. 이에 앞서 규명위원회 김형태(金炯泰) 제1상임위원은 18일 발간된 월간지 신동아 2월호에 기고한 글(본보 18일자 A29면 보도)에서 “최 교수가 심한 고문을 받았으며 숨진 뒤에 건물 밖으로 던져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최종길교수 ‘의문사’인정 못받는다

진상위 “민주화운동 증거 불충분” 논란일 듯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간첩혐의로 조사받다 숨진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가 현행 법률상 의문사로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문사 사건 1호로 꼽히는 최교수는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회의에서 학생운동에 대해 정부조처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발언을 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적극적으로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의문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개입에 의한

죽음과 민주화운동 관련성 2가지가 모두 인정돼야 한다.

지난달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대표적인 민주화운동가인 계훈제 선생(자고)의 인정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최교수도 의문사로 인정되지 못할 경우 민주화운동의 인정범위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현재까지 조사결과 당시 중앙정보부의 고문치사와 간첩조작 등의 사실이 밝혀져 최교수가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에 의해 숨진 것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민주화운동 관련성 부분은 증거가 불충분해 현행 법률 하에서는 최교수가 의문사로 인

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최교수는 정권의 폭압적인 통치에 의해 인권이 유린된 대표적인 의문사지만 민주화운동에 대해 편협하게 규정된 현행 법률 때문에 기각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럴 경우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한다는 특별법의 제정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이창복 의원은 이날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의문사 특별법 개정안에서 의문사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또는 권위주의적 통치 하의 정치 사회적 탄압과정에서 발생한 죽음’으로 폭넓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영수기자 nomad@kmib.co.kr

“최종길 교수 사건 박정희대통령에 直報”

이후라 前중정부장 진술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간첩혐의로 조사받다 숨진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 의문사와 관련, 당시 이후라 중정부장이 최교수 사건을 보고받은 뒤 박정희 대통령에게 직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이씨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 드러났다. 진상규명위는 지난주 조사관 2명을 경기 하남시 이씨 자택에 보내 방문조사를 했으며 이씨

는 이 자리에서 “1973년 최교수 사망 직후 조모 당시 중정 차장보로부터 사건 전말을 보고받았다”고 진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조차장보로부터 “최교수가 조사 도중 간첩임을 자백했으며 이후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 화장실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숨졌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어 조차장보로부터 사건을 보고받은 뒤 박대통령에게 곧바로

보고했으며 대통령은 “사람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며 질책했다고 진술했다고 진상규명위는 말했다.

최교수 사망사건을 대통령에게 직보했다는 점은 서울법대 교수라는 최교수의 신분을 감안하더라도 이례적인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씨는 그러나 최근 진상규명위 조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최교수 타살의혹 부분에 대해선 “그런 보고를 받은 바 없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영수기자

최종길교수 사망사건

이후락씨 "최교수사건 박대통령에 직보"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지난 73년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간첩 혐의로 조사를 받다 숨진 고 최종길 서울법대 교수 의문사와 관련, 당시 이후락 중정부장이 최 교수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박정희 대통령에 직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이씨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 드러났다.

진상규명위는 지난주 주무 조사관 2명을 경기도 하남시 이씨 자택으로 보내 방문 조사를 벌였으며 이씨는 이 자리에서 "지난 73년 최 교수 사망 직후 조모 당시 중정 차장보로부터 사건에 대한 전말을 보고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당시 조 차장보로부터 '최 교수가 조사도중 간첩임을 자백했으며 이후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 화장실 창문밖으로 뛰어 내려 숨졌다'는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어 "조 차장보로부터 사건을 보고 받은 뒤 박 대통령에게 곧바로 보고했으며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람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며 질책했다"고 진술했다고 진상규명위는 말했다.

최 교수 사망사건을 이례적으로 대통령에게 직보했다는 점은 서울법대 교수라는 최 교수의 신분을 감안하더라도 이례적인 것으로 여겨져 주목되고 있다.

이씨는 그러나 최근 진상규명위 조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최 교수의 타살의혹 부분에 대해선 '그런 보고를 받은 바 없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를 조사했던 한 조사관은 "이씨 담당 의료진과 주변에 대한 조사결과 조사가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며 "2~3시간에 걸친 조사동안 이씨는 사건 당시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이번 방문 조사에서 최 교수 사망사건 전반에 관해 진술을 청취했다면서도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언급을 회피했다.

진상규명위는 그러나 이번 방문 조사로, 이씨가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필요할 경우 조만간 추가 방문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치열 전 중정차장에 대해서는 건강이 좋지 않아 아직 조사를 벌이지 못했다고 진상규명위는 밝혔다.

south@yna.co.kr

(끝)

최종길교수 사망사건 박대통령에 직접보고

이후락 당시 중정부장 진술... "타살보고 안받아" 주장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 숨진 최종길 서울법대 교수 사건을 이후락(사진) 당시 중앙정보부장 박정희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5일 '지난주 조사관 2명을 경기도 하남시 이 전 부장 집으로 보내 방문조

사를 벌였다'며 '이 전 부장은 조사에서 '최 교수 사망 직후 조아무개 당시 중정 차장보로부터 사건 전말을 보고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장은 "당시 조 차장보한테서 '최 교수가 간첩임을 자백한 뒤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 화장실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숨졌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뒤 이를 박 대통령에게 직보했다"고 진술했다고 규명위 관계자는 전했다.

규명위는 이에 앞서 당시 중정 고위관계자한테 '최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내용을 가감없이 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전 부장을 집중 추궁했으나, 이 전 부장은 "타살했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규명위 관계자는 말했다.

규명위는 또 당시 최 교수 주검을 부검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한테서 "부검하던 날 아침 중정동을 방문해 이 전 부장을 직접 만나 사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 부검에 앞서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사체검안서와 사망진단서도 같이 같은날 오후 중정요원 입회 아래 부검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이 전 부장은 "부검의와 변호사간 담당 검사를 만난 일이 없다"며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장준하 의문사 중정 개입여부 조사

"사고현장서 만난 3명이 다른말 말라" 출동경관 진술

1975년 경기도 포천군 약사봉을 오르다 의문의 죽음을 당한 재야운동가 장준하 선생 사건에 당시 중앙정보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5일 당시 사건 현장에 처음 출동했던 경찰 이아무개(56)씨를 최근 조사한 결과 "당시 변호사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과속소로 내려가는 도중 계곡에서 나타난 남자 3명한테서 '본 것 외에는 다른 말

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 출신의 이 관계자는 또 "장준하 선생 사고 한달 뒤 사건 현장에서 재야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추모회 자리에 중앙정보부로부터 이들의 동향 파악을 위해 녹음기를 가져가라는 지시를 받고 따랐다가 벽기완 씨에게 발견돼 녹음기를 빼앗긴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규명위원회는 전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최종길 교수 사건 박대통령에 보고"

이후락씨 의문사조사 진술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간첩 혐의로 조사를 받다 추락사한 서울대 최종길(당시 42세)교수 사건과 관련, 당시 이후락 정보부장도 최교수가 간첩이었다는 수사관들의 보고에 의구심을 품었다고 밝혔다.

5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주 경기도 하남시의 자택으로 이씨를 방문조사한 결과 이씨에게서 "사건 직후 정보부 趙모차장으로부터 최교수가 자살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최교수가 진짜 간첩이었을 리 없다는 생각에 보고내용을 언론에 발표하기가 부담스러웠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씨는 그동안 최교수 사건과 관련, "발표된 사실 외엔 아는 것이 없다"는 진술만을 되풀이 해왔으며 이번처럼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는 처음이다. 이씨는 "보고 내용을 대통령에게 직보했으며, 대통령으로부터 '사람 관리를 잘못했다'는 편지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남궁욱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장준하선생 의문사 中情 개입가능성”

당시 경찰관 “낯선 남자 3명이 합구 지시”

1975년 경기 포천군 약사봉에서 등반하다 실족사한 것으로 발표된 재야운동가 장준하(張俊河) 선생의 의문사 사건에 당시 중앙정보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의문사진상규명위에 따르면 사건 당시 현장에 처음 출동했던 경찰관 이모씨(56·전남경찰청 모 파출소장)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변사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파출소로 내려가는 도중 계곡에서 나타난 낯선 남자 3명으로부터 ‘본 것 이외에는 다른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받았다는 것.

규명위는 사고 현장에서 이씨가 만난 3명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들이 중앙정보부 직원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최종길교수 사망 차대통령에 보고”

이후락씨 진술

1973년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간첩 혐의로 조사를 받다 숨진 최종길(崔鍾吉) 서울대법대 교수의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 당시 중정부장이던 이후락(李厚洛)씨가 최 교수 사건에 대해 보고 받고 이를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이씨에 대한 방문 조사에서 드러났다.

진상규명위는 지난주 조사관 2명

을 경기 하남시의 이씨 자택에 보내 방문조사를 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씨는 “최 교수 사망 직후 조모 당시 중정 차장보로부터 사건 전말을 보고받았다”고 진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이를 박 대통령에게 곧바로 보고했으며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도대체 사람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질책했다는 것.

그러나 이씨는 최 교수의 타살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미기자 kimsunmi@donga.com

“최종길교수 자살 가능성”

의문사규명위 첫 제기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다 숨진 서울대 법대 최종길(崔鍾吉) 교수의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내부에서 최 교수의 자살 가능성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진상규명위의 한 관계자는 6일 “당시 중정의 한 직원으로부터 ‘최 교수가 조사받을 당시 팬티와 메리야스 차림이었으며 차모 수사관 등이 조를 짜서 아전집대봉으로 최 교수를 때렸다’는 진술을 받아냈다”며 “최 교수가 고문에 따른 심한 정신적 모욕감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자살 가능성 제기는 진상규명위가 지금까지 밝혀온 ‘타살 의혹’과는 정반대의 것이어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당시 최 교수를 직접 수사했던 차 수사관과 그의 상관인 안모씨, 대공수사단장이었던 장모씨를 조만간 불러 대질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 의문사사건과 관련해 현재 진상규명위 조사관 2명과 간부 2명이 각각 의견서를 작성 중이며 진상규명위는 이 의견들을 취합해 최종보고서를 내게 된다.

한편 진상규명위는 지난해 10월 일본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3개국의 법의학자들에게 국내 부검의가 작성한 최 교수 부검감정서와 사진 등에 대한 감정을 의뢰해 지난해 12월 말 통보받은 결과 일본 법의학자는 ‘사망 후 추락’,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법의학자들은 ‘생존 상태에서 추락’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선미기자 kimsunmi@donga.com

“최종길교수 사망현장 中情요원 입맞춰”

의문사조 진술확보

왜곡·은폐 가능성 커져

1973년 간첩 혐의로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던 의문사한 최종길 서울법대 교수 사건에 대한 1988년의 검찰조사 당시, 사고현장에 있었던 중정 직원들이 사전에 진술을 맞췄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29일 “88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진상규명 요청으로 검찰이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중

정 간부와 직원들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최교수가 중정 지하 조사실에 있다가 7층으로 올라간 시간 등 당시 정황과 관련해 사전에 입을 맞췄음이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본보 2001년12월10일자 보도)

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최교수 수 사라인에 있던 간부와 직원들이 모여 담당 수사관의 주도로 현장검증 시각 및 사고 당시 중정건물에 있던 인물들의 이동시간 등을 논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이는 이들이 사건의 진실을 왜곡 또는 은폐하려 했을 가능성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88년 검찰에서 조사받은 중정직원 중 일부는 중정의 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에서도 근무했던 만큼 안기부가 최교수 의문사의 진상은폐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강영수기자 nomad@kmib.co.kr

‘최종길교수 의문사’ 88년 검찰조사때

中情직원 사전에 입맞춰

의문사 진상규명위 밝혀

1973년 간첩 혐의로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가 의문사한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 사건에 대한 88년 검찰조사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던 중정 직원들이 사전에 입을 맞췄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9일 “88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진상규명 요청으로 검찰이 사고 현장에 있던 중정간부 및 직원들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최교수가 지하조사실에 있다가 7층으로 올라간 시간 등과 관련해 사전에 진술을 맞췄음이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드러났

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사고가 난 중정건물에 있던 인물들의 이동시간은 사고 당시 정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이들이 사전에 입을 맞췄다는 것은 사건의 진실을 왜곡 또는 은폐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88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중정직원 중 일부는 중정의 후신인 안기부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만큼 안기부가 ‘최교수 의문사’의 진상은폐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희정기자 nivose@munhwa.co.kr

‘최종길교수 의문사’ 검찰조사때

中情직원 진술 사전조율

1973년 간첩 혐의로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가 사망한 고(故) 최종길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 의문사에 대한 1988년 검찰조사에서 중앙정보부 직원들이 사전에 진술을 꿰어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9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진상규명 요청

으로 검찰이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중정직원들을 조사할 때 10명 이내의 요원들이 중정 지하 조사실에 있다가 최교수가 떨어진 7층으로 올라간 시간 등과 관련해 사전에 서로 진술을 맞췄음이 다른 관계자의 진술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 김준근 제1상임위원은

“사고 당시 관련 정보부원의 이동시간은 최교수가 7층에서 투신자살했는지, 요원들이 이미 숨진 최교수 시체를 7층에서 던졌는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이들이 사전에 입을 맞춘 것은 진실을 은폐 또는 왜곡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배정수기자

‘최종길교수 의문사’ 88년 검찰조사때

中情직원들 사전에 진술맞춰

진실은폐 의혹 커져

1973년 간첩 혐의로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가 의문사한 고 최종길 당시 서울법대 교수 사건에 대한 88년의 검찰조사 당시, 사고현장에 있었던 중정 직원들이 사전에 진술을 맞췄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9일 “88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진상규명 요청으로 검찰이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중정 간부와 직원들을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사고 당시 중정 지하조사실에 있다가 최 교수가 데밀러 떨어진 7층으로 올라간 시간 등과 관련해 서로 사전에 진술을 맞췄음이 다

른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규명위 관계자는 “사고가 난 중정 건물에 있던 인물들의 이동시간은 사고 당시의 정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이들이 사전에 입을 맞췄다는 것은 사건의 진실을 왜곡 또는 은폐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당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진상규명 요청에 의해 진상조사에 나섰으나 “타살이나 자살 증거를 찾지 못했으며, 간첩 혐의 또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결과만을 내놓은 채 사건을 종결 지었다.

/김희균기자

최종길 교수 의문사 88년 조사때

중정요원 '입맞춤' 드러나

이윤성씨 프락치활동 의혹

73년 중앙정보부에서 간첩 혐의로 조사받던 중 숨진 서울대 최종길 교수 사건에 대해 검찰이 88년 조사할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던 중정 직원들이 사전에 입을 맞췄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9일 "88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진상규명 요청으로 검찰이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중정 간부 및 직원들

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최 교수가 떨어진 7층으로 올라간 시간 등에 대해 말을 맞췄음이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중정 직원들의 이동시간은 사고 당시 정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인 만큼 이들이 사전에 입을 맞췄다는 것은 사건의 진실을 왜곡·은폐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편 83년 신군부가 운동권 학생들의 동향 파악을 위해 기획한 '녹화사업' 과정에서 숨진 이윤성(당시 21세·성균관대 2년 휴학)씨가 보안사의 강요로 사망 한달 전 학교 앞에서 친구들과 만나 프락치 활동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씨의 같은 학과 친구 최모(41·성대 사학과 졸업)씨는 이날 의문사진상규명위에서 회견을 갖고 "이씨가 사망하기 한달 전쯤인 83년 3월 말 휴가를 나와 학교 앞 술집에서 1시간 정도 만났으며, 학생 운동 상황 등을 자세하게 물었다."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kdaily.com

최종길사건 1988년 검찰조사때

中情직원들 사전에 입맞춰

의문사규명위 밝혀

1973년 간첩 혐의로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가 의문사 한 고 최종길(崔鍾吉) 당시 서울법대 교수 사건에 대한 88년의 검찰조사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던 중정 직원들이 사전에 진술을 맞췄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9일

"88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진상규명 요청으로 검찰이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중정간부 및 직원들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사고 당시 중정 지하조사실에 있다가 최 교수가 때밀러 떨어진 7층으로 올라간 시간 등과 관련해 서로 사전에 진술을 맞췄음이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사고가 난 중정 건물에 있던 인물들의 이동시간은 사고 당시의 정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이들이 사전에 입을 맞췄다는 것은 사건의 진실을 왜곡 또는 은폐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진상규명 요청에 의해 진상조사에 나섰으나 "타살이나 자살증거를 찾지 못했으며 간첩 혐의 또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알맹이 없는 결과만을 내놓은 채 사건을 종결 지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최종길 교수 자살 아니다”

신문조서등 서류 중정 수사과서 허위 작성

진상규명위 “수사관진술 확보”

지난 73년 간첩 혐의로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던 중 의문사한 서울대 최종길 교수 사건과 관련, 당시 최 교수를 조사했던 대부분의 중정 수사관들은 “최 교수가 간첩임을 자백하지 않았고, 자살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는 30일 “최 교수를 직접 담당했던 차모씨와 김모씨 외에 10여명의 수사관들은 이같이 진술했으며, 고문 사실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또 “검찰 송치에 필요

한 피의자신문조서, 긴급구속영장, 첩보보고서, 수사보고서 등 모든 서류는 최 교수가 사망한 뒤 12시간만에 중정 수사과 주도로 허위 작성됐다.”면서 “중정 수사관이 사고 직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찾아가 최 교수의 부검 원장을 강제로 빼앗으려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중정 수사관들은 최근 조사에서 “당시 경비가 철거해 최 교수 혼자 7층 화장실에서 뛰어내릴 상황도 아니었고, 뛰어내리기 위해 밧고 올라갔다는 변기에 발자국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kdaily.com

“최종길교수 사망 경위 중앙정보부 사후 조작”

의문사규명위 “당시 수사관 진술 확보”

1973년 간첩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중앙정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된 뒤, 자살로 처리된 최종길 전 서울대 법대 교수의 사망 경위를 중앙정보부가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했다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30일 밝혔다.

규명위는 이날 “피의자신문조서, 긴급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 등 최 교수와 관련된 일체의 송치 서류가 최 교수 사망 후 중정 수사과 지시에 의해 조작됐다는 당시 수사관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최 교수의 자필 진술서에 간첩 자백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김준곤 규명위 제1상임위원은 “지하에서 누군가 데리고 나가는 것을 목격했고 5분 뒤에 고향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7층 경비원도

상부의 지시로 인형 거짓 목격담이었다고 실토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비원의 진술은 최 교수 투신의 유일한 근거였다.

규명위는 이밖에 “중정이 유족을 찾아가 3천만원의 보상금 등을 제안하며 가족들을 회유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신윤동욱 기자 syuk@hani.co.kr

중정, '최 교수 의문사' 조직적 은폐

의문사규명위 "서류조작, 유족회유 등 증거 확보"

송화선 기자 hsahn@naeil.com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간첩혐의로 조사를 받다 사망한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을 당시 중정이 조직적으로 은폐했음이 드러났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 교수가 사망하고 3~4일이 지난 후 중정 수사관 2명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찾아가 보관중인 부검원장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중정측이 증거를 은폐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규명위는 "피의자신문조서, 긴급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 등 최 교수와 관련된 일체의 송치 서류가 최 교수 사망 후 조작됐다는

당시 수사관들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최 교수 사망 직후 '지하에서 누군가 최 교수를 데리고 나가는 것을 목격했고 5분 뒤에 고함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던 7층 경비원의 목격담도 상부의 지시로 인한 거짓 진술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정이 최 교수 유가족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제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규명위측은 "모 중정 간부가 최 교수 사망 후 유족에게 3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유자녀의 교육을 책임질테니 장례를 가족장으로 조출하게 치른 후 화장할 것을 요청했다고 진술했다"며 "중정 발표대로 최 교수가 스스로 간첩임을 시인한 후 뛰어내려 자살했다면 이같은 보상제외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고문으로 숨진 뒤 추락했다"

일본 법의학자 가미야마, 최종길 교수 사인 새롭게 제기... 국내 전문가들은 견해 달라

5월4일 오후 5시30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에서 법의학 논쟁이 벌어졌다. 논쟁의 주인공은 고려대 의과대학 황적준 교수(55)와 일본 법의학자 가미야마 시게타로 박사(69).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의문사한 최종길 전 서울대 교수의 사인을 놓고 설전이 오갔다. 이날 논쟁은 2시간30분 동안 비공개로 이루어졌다.

자살인가, 타살 후 추락인가

최교수 죽음에 대한 공권력 개입 여부는 밝혀졌다. 진상규명위 활동으로 고문 사실은 이미 확인되었다. 남은 쟁점은 죽음에 이른 직접적 원인이다. 과연 7층 건물에서 뛰어내린 자살인지, 아니면 고문으로 인한 타살 후 위장 추락인지가 핵심이다. 그동안 국내 법의학자들은 직접 사인을 추락에 의한 심장 파열로 보았다. 그러나 가미야마 박사는 추락 전에 최교수가 고문으로 사망했을 것이라는 '새로운' 소견을 제시했다

가미야마 박사는 1973년부터 도쿄 시 검찰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금도 그는 비서관으로 1주일에 한 번씩 시체를 10구 이상



가미야마 박사는 "최종길은 정교한 고문에 의해 타살되었다"라고 주장한다.

검안한다. 그는 1980년 <표준 법의학>을 집필했고, 1997년 일본범죄학회상을 수상했다. 4천5백건이 넘는 해부와 4천건이 넘는 검안 경험이 있다. 가미야마 박사는

지난해 진상규명위로부터 최종길·김준배·이내창 사건의 감정 을 의뢰받았다. 5월5일 천주교인 권위원회에서 그를 만났다. 가미야마 박사는 "최종길은 정

교한 고문에 의해 사망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교수가 고문에 의해 숨진 뒤 추락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혈액의 출혈과 응혈 반응에 따라 그는 손상 부위의 시간차를 구분했다. 살아 있을 때, 죽음에 임박할 때, 사망 후 상처로 나누었다. 그는 먼저 심장이 파열했고, 숨진 뒤에 왼쪽 발목 상처가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으깨진 왼쪽 발목은 유일하게 밖으로 노출된 상처다. 그런데 피가 흘렀거나 굳은 흔적이 전혀 없다. 가미야마 박사는 심장이 정지된 뒤에 발생한 상처의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이 상처에 대해서는 해외 법의학자도 관심을 나타냈다(20쪽 상자 기사 참조).

가미야마 박사는 상처 부위와 고문 방법에 대해서도 추정했다. '오른쪽 무릎 뒤의 찰과상은 바닥에 무릎을 구부리게 한 뒤 각목을 끼어 압박을 가하면 나타난다. 몸을 묶은 채 전기 고문을 가하면 외상 없이도 두부 내 출혈이 일어난다. 배를 시멘트 바닥에 고정된 상태에서 충격을

가하면 심장이 파열된다.' 이는 과거 고문 기술자들의 통단구이·비행기 태우기 등 방법과 일치한다. 가미야마 박사는 "내부 장기 손상 은 수건이나 천을 감싼 둔기로 구

타하면 가능하다. 그러면 의상이 남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상이 남지 않는 총격을 '보디 스타프'라는 용어로 설명했다.

당시 수사관들은 고문 사실 부인

지금까지 국내에서 최종길 교수에 대한 법의학적 소견은 세 차례 있었다. <시사저널>은 세 가지 감정서를 모두 입수했다. 먼저 1973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촉탁의사 김상현씨는 최고수를 직접 부검했다. 그는 부검 소견서에 심장 파열과 두개저 골절로 인한 사망으로 결론 냈다. 하지만 그는 고문에 의한 사망인지 추락사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1988년 이정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김상현씨 감정서를 재감정했다. 이교수는 추락에 의한 심장 파열이 직접 사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진상규명위는 고려대학교 황적준 교수에게 감정을 의뢰했다. 황교수는 추락에 의한 동시 다발 손상으로 보았다. 다만 최고수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떨어졌는지,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추락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최고수를 직접 조사했던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 차철권씨는 고문 사실마저 부인하고 있다. 또 다른 수사관이었던 김상원씨는 미국에 거주하며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더 이상 당시 수사관들의 입에 기대할 것이 없다. 시신이 말하는 증언, 법의학적 소견이 중요한 이유다. 진상규명위는 5월 안에 최종길 교수 사건 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한다.

고재규 기자 unjusa@sisaexpress.com

부검 소견서, 오류는 많고 정보는 적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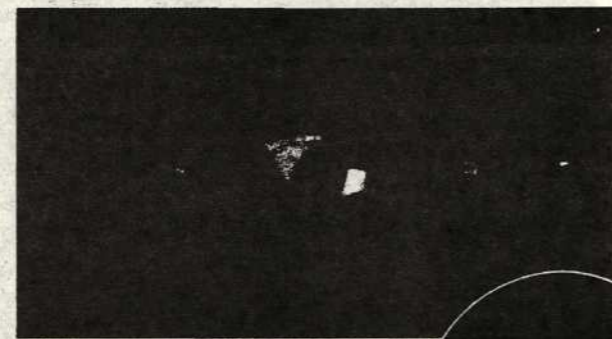
해의 법의학자들 "시강 상태·발목 상처 등 사후 손상 가능성 크다" 추정

지난 2월 <시사저널>과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해의 법의학자 50여 명에게 최종길 교수 사건에 대한 자료를 보냈다. 당시 부검 사진과 부검 소견서를 요약한 것이다. 4월까지 모두 11명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해의 법의학자들은 공통으로 '정보 부족'을 지적했다. 부검 소견서에 정보가 거의 없다는 것이

망후 13시간이 경과했다는 기록과 무릎 아래 시강(시체 경직)이 남아 있다는 기록은 서로 맞지 않는다. 적어도 24시간 이상 경과했다"라고 답변했다. 미국의 빈센트 박사도 시강에 대해 언급했다. 보통 시체가 굳는 것을 뜻하는 시강은 턱에서 시작해 아래로 진행되는

를 사후 손상으로 보았다. 함부르크의 류셀 박사와 스퍼하케 박사도 유력한 사후 손상의 증거로 추정했다. 독일의 막스아이너 교수는 "사후 손상이다. 하지만 상처 부위를 물로 세척했는지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다른 법의학자들도 같은 견해를 보였다. 추



1973년 사망 당시의 최고수(위). 해의 법의학자들은 왼쪽 발목 상처(오른쪽)를 사후 손상으로 추정한다.

다. 가미야마 박사도 동일한 지적을 했다. 그는 1973년 김상현씨의 부검은 아마추어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상현씨는 부검의 기본인 체중이나 직장 내 온도를 측정하지 않았다. 가미야마 박사는 "한국 법의학자들의 부검 수준은 후하게 점수를 주어도 100점 만점에 40점밖에 안된다"라고 말했다.

정보 부족뿐 아니라 오류도 제기되었다. 루마니아의 크리스티아 쿠르카 박사는 "부검 소견서에 사

견서대로 무릎 아래 시강이 남아있다면 소멸되는 쪽으로 보아야 한다. 부검 소견서에 나타난 13시간 20분은 시강이 무릎 아래까지 소멸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다.

해의 법의학자들은 왼쪽 발목 상처에 관심을 나타냈다. 몇몇 법의학자는 동료들에게 보여주며 공동 의견을 보내왔다. 루마니아 드레스델 박사는 왼쪽 발목 상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첫 단추부터 부실하게 채워진 부검 소견서를 이해하지 못했다.

해의 법의학자들의 지적에 대해 황적준 교수는 "아마도 신고 있던 양말을 벗기면서 핏자국이 묻어났을 것이다"라고 사후 손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나 왼쪽 발목 위 양쪽 팔목 위의 골절 부위에

대해서도 사후 손상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루마니아의 블라디미르 벨리스 박사는 "부러진 양 팔목 윗부분에서 응혈 반응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도 사후 손상 가능성이 높은 증거이다"라고 답했다. 그들은 한결같이 최고수 사건을 특이한(unusual) 사례라고 지적했다.



“최교수 타살 알고서도 중정 수뇌 자살로 몰아”

의문사규명위 밝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14일, 지난 1973년 간첩단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숨진 서울대 법대 최종길(당시 42살) 교수 사건에 대해 당시 중앙정보부 간부들이 타살

을 의심하면서도 자살로 처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당시 중정의 장아무개 수사단장에게서 '최 교수가 타살됐다'는 판단을 했지만, 당시 중정 분위기가 자살로 몰아가 사인에 대한 추가 조사 등 더 이상의 조처를 취하지 않았

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특히 장 단장은 "주검 상태로 보아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의 심한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등 최 교수의 타살 가능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진상규명위는 전했다.

진상규명위는 또 "당시 조아무개 차장보가 중정 대공수사국장에게 사건 수습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부하들이 관련 서류를 사후에 위조했다는 진술도 받아냈다"며 "이는 최 교수 타살을 은폐하기 위해 중정 수뇌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최종길교수 간첩혐의 씩위 자살위장”

신동아, “수사관 허위보고” 당시 中情간부 증언담긴 기고문 게재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간첩혐의로 조사받던 숨진 서울대 법대 최종길(崔鍾吉·사진) 교수 사건과 관련, 당시 중정 수사관들이 간부들에게 최교수를 간첩으로 허위보고한 뒤 자살로 위장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종길 교수 고문치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추진위원회” 실행위원장이 국민대 법대 이광택(李光澤) 교수는 최 교수 사건의 대표징정인 자격으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기록을 모두 열람한 뒤 19일 발간된 '신동아' 6월호에 이 같은 글을 기고했다.

기고문에 따르면 당시 중정의 장모 단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부하 직원들이 최 교수가 간첩임을 자백했다고 나를 속였기 때문에 최 교수를 7층으로 옮기라고 지시한 것이며 지



금 생각해보니 (수사관들이) 최 교수의 타살을 자살로 위장하려고 한 것 같아 분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 단장은 "최 교수는 중정 조사에서 간첩임을 자백한 일이 없는 데다 증거도 없었다"고 말했으며 당시 중정 안모 과장은 "최 교수의 간첩혐의에 대해 중정이 어떠한 내사활동도 벌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이 교수는 밝혔다.

이 교수는 기고문에서 "최 교수에게 간첩혐의가 없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진 이상 최 교수가 자살했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도 사라져 버렸다"고 밝혔다. 김선미기자 kimsunmi@donga.com

“최종길교수 공작원 삼으려 연행”

의문사규명위 진술 확보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을 조사해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지난 1973년 10월 당시 중앙정보부가 최 교수를 연행해 조사했던 목적이 간첩 혐의 수사가 아니라 이른바 '공작 목적'이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최 교수는 연행 초기 간첩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사실이 없다고 판명된 뒤에도 조사를 계속 받았다”며 “중앙정보부가 최 교수를 조사한 목적이 ‘공작심사’였다는 진술을 당시 수사 담당자와 상급 지휘관들로부터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학원 정보를 빼내고 운동권 학생들을 포섭하려는 교수 공작원 또는 중앙정보부의 대북 관계 특별요원으로 삼으려 했던 것은 아닌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정보부는 최 교수가 중앙정보부 남산정사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직후, 최 교수가 고정간첩이며 가족과 국내 조지망을 보호할 목적으로 투신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훈 기자 hoonk@hani.co.kr

의문사 최종길교수 공권력에 사망 판정

진상규명위 '민주화' 인정

지난 73년 간첩혐의로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받던 의문사를 당한 고 최종길 서울법대 교수는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숨졌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고문과 협박 등 불법수사에도 불구하고 최 교수는 강요된 간첩자백을 하지 않았다”며 “의식적, 적극적 항거 외에도 권위주의적 공권력 행사에 순응하지 않음으로써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행위 또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활동’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최 교수 죽음의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충남기자 utopian21@munhwa.co.kr

<최종길교수 '의문사' 인정 의미>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 국내 '의문사 1호'로 여겨지던 최종길 전 서울법대 교수의 죽음이 민주화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의문사'로 결정된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당시 핵심 권력기관의 부도덕성을 국가기관이 처음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최 교수 사건이 발생한 지난 1973년은 박정희 정권이 장기독재를 위해 제정한 유신헌법에 대한 반발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돼 유신체제의 정당성이 부정되고 권위주의 통치가 약화되던 시기였다.

체제수호를 담당하던 당시 중앙정보부는 '김대중 납치사건'과 반정부 인사들을 내란형으로 체포하는 '강수'와 함께 간첩사건 발표등을 통해 국민에게 안보위기의식을 조성, 반체제를 누르고 권위주의적 통치를 강화하고자 했으며 이런 흐름속에서 최 교수의 죽음이 발생했다는 것이 진상규명위의 판단이다.

정권안보를 위해 당시 서울법대 교수로 사회적 영향력이 컸던 최 교수를 '공작대상'으로 삼으려 중정에 소환했다가 최 교수가 각본대로 따라주지 않자 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하고 이것이 직·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해 최 교수의 죽음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중정이 정권안보를 위해 한 개인을 죽음으로 몰고갔고 이를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권력을 틀어쥐었던 중정이나 옛 안기부가 여타 의문사 사건에도 어떤 식으로든 관련됐을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최 교수 사건과 더불어 주요 의문사로 꼽히는 재야인사 장준하 선생 의문사와 대학생 이내창, 이철규씨 의문사 그리고 노동운동가 박창수씨의 의문사 등에는 모두 중정이나 안기부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큰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중정이나 안기부가 각종 의문사에 개입됐다는 의혹을 갖고 있으면서도 민간신문이어서 진실을 밝혀내는데 한계를 겪었던 유가족이나 민주화단체들의 진실규명 요구는 이번 최 교수 사건의 의문사 인정을 계기로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민주화운동 관련성에 대한 진상규명위측 해석의 포괄성과 적극성도 최 교수 의문사 인정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당초 최 교수 사건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음에도 진상규명위는 이번 결정에서 "최 교수의 간첩자백 거부라는 소극적인 항거 또한 '권위주의적 통치 또는 군사독재에 항거한 활동'"으로 해석함으로써 결정을 앞둔 다른 진정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진상규명위의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 교수 사건의 의문사 인정은 진상규명위를 비롯, 사법당국에 '공소시효 문제'라는 또 하나의 과제를 안겼다.

진상규명위는 최 교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으로 인정된 수사관들이나 중정 직원들의 경우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완성돼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지 않기로 하고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배제의 필요성을 담은 권고안만 낼 방침이다.

최 교수의 아들인 최광준(38) 경희대 교수는 공소시효 문제때문에 아버지의 죽음에 관련된 이들에 대해 형사소송을 포기한 채 국가를 상대로 유가족이 겪었던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만 낼 예정이어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최종길교수 죽음,민주화운동 관련 인정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지난 73년 간첩혐의로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 의문사를 당한 고 최종길 서울법대 교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숨졌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중정의 고문과 협박 등 불법수사에도 불구하고 최 교수는 사망때까지 강요된 간첩자백을 하지 않았다"며 "의식적,적극적 항거 외에도 권위주의적 공권력 행사에 순응하지 않음으로써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행위 또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활동'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최 교수 죽음의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최 교수는 고문으로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수사관들에 의해 7층 비상계단에서 내던져져 사망했거나 고문으로 사망한 뒤 수사관들에 의해 자살로 위장되는 등의 수법으로 타살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직접 타살'이 아니라 허다도 수사관들의 고문, 협박이 최 교수의 죽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 교수는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 행사로 숨졌음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 최 교수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를 요청했다.

한편 최 교수의 고문 및 사망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당시 중정 직원들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와 관련, 진상규명위는 이들의 범죄가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진상규명위는 진정사건 80건과 직권사건 5건 등 85건에 대한 조사를 벌여 현재까지 모두 16건을 결정했으며 이 중 최 교수 사건을 제외하고 '의문사'로 인정된 경우는 지난 84년 청송감호소에서 재소자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다 교도관들에게 폭행당해 숨진 박영두씨 사건과 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 보안사에서 조사를 받다 숨진 임기윤 목사 사건 등 2건이다.

south@yna.co.kr

(끝)

"최종길교수 사건 수사해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KNCC는 지난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간첩혐의로 조사 받다 숨진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 사건이 뒤늦게나마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규명되어 다행이라고 논평했습니다.

KNCC는 또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두지 말아야 한다며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최교수 사건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최교수와 유가족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빨리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보선[bosun@ytn.co.kr]

" 29년만에 밝혀진 의문사 "

[앵커멘트]

고 최종길 서울대 교수 의문사 사건은 사건 발생 29년만에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타살로 결론이 났습니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최 교수 진정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 하고 최 교수의 민주화운동 관련성도 인정했습니다.

정병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3년 중앙정보부에 간첩 혐의로 조사를 받으려 간 뒤 사흘만에 싸늘한 시신이 돼 왔던 고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17개월간의 조사를 통해 최 교수가 타살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또 최 교수가 유신 헌법에 저항했다는 점을 들어 민주화 운동 관련성도 인정했습니다.

[인터뷰:김준곤, 의문사진상규명위 상임위원] "최종길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사망했다고 인정한다"

최 교수 타살 결론은 중앙정보부가 최교수가 숨진 뒤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해왔다는 당시 중정 간부들의 증언과 법의학자들의 소견이 뒷받침됐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에 최 교수와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최광준, 고 최종길 교수 아들] "국가 기관을 통해 타살로 결론내려진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아버지의 죽음은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위원회측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최 교수의 고문과 사망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당시 중정 직원들에 대해 형사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 정병화입니다.

정병화[chung@ytn.co.kr].

[뉴스 9]최종길 교수 죽음, 민주화 운동 인정



○앵커: 지난 73년 간첩 혐의로 중앙정보부 조사를 받다 숨진 최종길 교수가 자살이 아닌 고문으로 사망했다는 최종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종길 교수는 고문을 못 이겨 숨졌다는 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최종결정입니다. 설령 직접적인 타살이 아니더라도 고문이 최 교수 죽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가 그의 죽음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김준곤(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이미 사망한 사람을 바닥에 운반하여 추락으로 인한 사망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발바닥에 둔기 등으로 외력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기자: 최 교수가 간첩혐의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투신자살했다는 당시 중정위의 수사결과를 정면으로 뒤집은 결정입니다. 또 모진 고문을 받고도 강요된 간첩혐의를 자백하지 않은 점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됐습니다.

○최광준(고 최종길 교수 아들): 누가 어떻게 아버님을 직접적인 사인을 제공해서 돌아가시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기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 최 교수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 회복과 보상심의를 요청했습니다. KBS뉴스 원종진입니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공권력에 의한 타살 첫 확인

“고 최종길 교수 정보부 위법행위로 사망” 민주화운동도 인정...유가족들 손배 청구 사망 관련자 공소시효 지나 수사 못해

의 범함"이라며 "국정원도 장준하·이철규·박정수 사건 등 주요 의문사의 조사협조를 회피할 경우 책임을 편지 어려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교수의 아들인 최광준(38) 경희대 법대 교수는 오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를 상대로 유가족이 겪었던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측은 이날 국정원 앞에서 최교수의 타살에 대한 항의집회를 계획하는 등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류정민 기자 donack@labow.com

고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가 지난 73년 당시 중앙정보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타살됐다는 사실이 정부기관에 의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 >관련기사 14면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길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사망했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해외법의학자의 사후손상 소견, 중정 간부들의 최 교수 타살인정 진술, 현장경증조사 허위작성 등을 종합해 볼 때 타살이 명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상규명위는 "최교수가 각종 불법수사(고문, 강제구금)에도 불구하고 강요된 진술을 하지 않았다"며 "소극적 저항행위 또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활동'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진상규명위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 최교수 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를 요청했다.

최교수가 중정에 의해 타살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장준하·박정수 사건 등 주요 의문사에 대해서도 공권력에 의한 타살 의혹이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 타살의 최종 배후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과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문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준곤 진상규명위 제1상임위원은 "백정희, 이후락 등 당시 중정 실력자의 개입에 대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며 "최교수 사망에 관련한 중정 직원들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상임위원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진상규명위

“최종길교수 위법공권력에 의해 사망”

의문사 진상규명위
명예회복 요청키로

1973년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과 관련된 혐의로 조사를 받다 숨진 서울법대 최종길(당시 42살·사진) 교수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숨졌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관련기사 2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27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종길 교수는 당시 중앙정보부의 불법 수사에도 간첩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등 권위주의적 공권력에 저항했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최 교수의 사망 원인에 대해선 “당시 중정 관계자들의 진술과 국내외



법의 학자들
의 소견 등
을 종합할
때, 의식불
명 또는 이
미 숨진 상
태에서 7층
아래로 던져
진 뒤, 자살로 위장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규명위는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에 최 교수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 교수의 고문, 사망에 가담한 당시 중정 직원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최종길교수 공권력에 희생”

의문사규명위 결론...명예회복 요청키로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간첩 혐의로 조사를 받다 의문사한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에 대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사망했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27일 이같이 발표한 데 이어 28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최교수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 지급 등의 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결정문에서 “1년 6개월에 걸친 위원회 조사결과 최교수가 자살했다고 주장하는 논거는 모두 믿기 어렵다”면서 “국내외 법의학자들의 검증, 당시 중정 일부 간부들의 타살 인정 진술, 송치서류와 현장검증 조사 허위작성 등을 종합할 때 타살 가능

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준곤 제1상임위원은 “최교수가 설사 의식 있는 상태에서 투신했다 해도 이는 공권력의 횡포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타살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상규명위는 이어 “최교수는 중정의 각종 불법 수사와 간첩 자백 강요 등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에 저항했다”며 “의문사특별법상 의식적·적극적 항거 외 공권력의 불법 행사에 순응하지 않는 소극적 저항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또 이 사건에 가담한 당시 중정 직원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지 않기로 했다. 배정수기자 cameo@kyunghyang.com

“1973년 의문사 故최종길교수 고문사망 가능성 크다”

진상규명위 최종결론

지난 73년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과 관련,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 의문사한 서울대 법대 최종길(崔鍾吉·당시 42세) 교수가 ‘간첩 혐의를 자백하고 자살했다’는 당시 중정 발표와는 달리 고문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는 27일 “최 교수는 중정의 ‘공작’ 과정

에서 고문을 받고 숨졌거나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중정 남산분청사 7층으로 옮겨져 내던져지는 방법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 교수의 죽음은 ‘유신 치하 공권력에 의한 위법적인 폭력에 의한 의로운 죽음’으로 자리매김됐다. 의문사위는 이날 위원 9명의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하고, 최 교수 및 유족에 대한 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심의를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발생 29년이 지난 이 사건의 전모

“공권력의 폭력에 의한 의로운 죽음” 평가 타살단정은 안해... 명예회복 심의 요청

73년 10월 19일 오전 1시40분	중정에서 조사받던 최 교수 사망
10월 25일	중정 검찰실 “간첩혐의 자백하고 조직보호 위해 투신자살”
88년 9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서울지검에 진정
10월 18일	서울지검 내사중결 “추락 사망사, 증거 미확보로 사실 규명 불가”
19일	공소시효 소멸
2000년 11월 23일	유가족 등 34명 형문사위에 진정 접수
12월 9일	의문사위 조사 착수
2001년 11월	현장 검증 및 국립의료원 등에서 자료 수집
12월	전 중정직원 “7층에서 밀었다는 직원 말 들었다” 고 증언
2002년 1월	일본 법의학자 사후(死後) 추락 가능성 제기
3월	이후락씨 방문 조사 “박정희 대통령에게 사후 보고”

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의문사위는 적잖은 곤욕을 치렀다. 의문사위는 지난 2000년 12월 10여명의 조사관을 투입해 조사에 착수해 17개월 동안 1000여명을 탐문하거나 소환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쌓인 관련 자료만 1만여쪽에 달했다.

그럼에도 사건은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의문사위는 최 교수가 고문으로 사망했다고 추정하는 근거로 ▲고문을 했다는 수사관들의 증언 ▲시신에 고문 받은 흔적이 있다는 법의학자들의 소견 ▲7층 화장실에서 투신했다는 경비원의 허위 진술 ▲현장검증 조서의 사후 조작 등을 들었다. 그러나 이런 정황이 있음에도 최대 쟁점이던 ‘타살(他殺)’에 대해서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혀내지는 못했다. 한상범 위원장은 “국정원 등 관련기관의 비협조와 강제수사권이 없는 현실인데다 대부분의 정황과 증거들이 조작·날조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의문사위가 공소시효의 문제를 들어 고문에 가담하거나 사건에 대한 허위서류를 작성한 중정 관련자에 대한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지 않기로 한 것도 이때문이다.

최 교수의 아들인 최광준(崔光濬·39) 경희대 법대 교수는 “처음부터 아버지가 고문에 의해 사망했다고 믿었다”며 “이번 결정은 국가기관에 의한 첫 인정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鄭佑相기자 imagine@chosun.com